

주간 통일정세

2016-15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4.10	北김정은, 조선총련 산하 조선대 개교 60주년 축하문(연합뉴스)
		정부 당국자, 북한 정권 실세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연합뉴스)
	4.11	北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4년...수령 결사옹위 독려(연합뉴스)
		北, 70일 전투 참여 독려...당원들 반응은 미온적(연합뉴스)
	4.12	주중 북한대사관 류원산 사진 내리고 ICBM 사진 게재(연합뉴스)
	4.13	북한, 5월 당대회 앞두고 시군별 당대표회 개최(연합뉴스)
		北, 한국전쟁 무기 생산지에 김일성·김정일 동상(연합뉴스)
		북한, 김일성 생일 앞두고 주민·기관 대거 표창(연합뉴스)
	4.14	北,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4년 맞아 충성 다짐(연합뉴스)
		北 김정은, 제7차 당대회 인민군 대표로 추대(연합뉴스)
		北김정은, '태양절' 맞아 재일동포에 교육비 23억원 지원(연합뉴스)
	4.15	北, 김일성 생일 중앙보고대회...김정은 옹호보위(연합뉴스)
		北, 김정은 지시한 백두산 3호 발전소 6개월만에 완공(연합뉴스)
		北 김정은, 김일성 생일에 금수산공전 참배(연합뉴스)
	경제	4.10
북한 노동자대회 참가 대표 2차 선발 취소(자유아시아방송)		
北, 김일성 생일 태양절 맞아 김정은에 충성 결의(연합뉴스)		
4.12		北, 주민에도 외화상납 강요...부유층엔 외화-원화 강제교환(연합뉴스)
		집단탈출 추정 中 닝보 북한식당 "내부조정 문제로 영업중단"(연합뉴스)
		日언론, 북한 광물 실은 트럭 여전히 중국으로 들어가(연합뉴스)
4.13	제재 한달 국제사회 '北기파' 구체화...해운·금융·교류차단(연합뉴스)	
	北, 개성공단 의류제품 중국 상점에 판매 시도(자유아시아방송)	
	돈줄막힌 북한, 문화재도 중국시장에 내다팔기 시작(연합뉴스)	
4.13	대북제재 결의에도... 1분기 북·중 무역액 12.7% 증가(연합뉴스)	
	北해외식당은 돈세탁 창구, 中 매체 집중조명(연합뉴스)	
		미얀마 북한 식당도 폐점 위기(자유아시아방송)

	4.14	AP통신, 북한 휘발유값 3월에 14% 급등...대북제재 등 영향(연합뉴스) 중국내 북한식당, 합작 기반으로 영업난 버터(자유아시아방송)		
	4.15	北, 합영회사 통해 中에 광물수출...대북제재 허점(자유아시아방송) 북한, 북중 경협재개 의지 표명...경제지대 등 개발 기대(자유아시아방송) 中 관영언론, 北식당 집중조명...불안한 미래 직면(연합뉴스)		
	4.16	北, 2월 중국산 비료수입 급증...제재 대비한 듯(미국의소리)		
사회 문화	4.10	北, “제재 이후 상품값 내려...자립경제 갖겠다” 주장(연합뉴스) 핵실험 돈으로 썰이나 달라...대북제재로 北내부 불만 팽배(연합뉴스)		
	4.11	北, 중국내 무역일꾼 단속...탈북루트 경비 대폭 강화했다(연합뉴스)		
	4.13	대북제재에도 외국인 북한관광은 계속(연합뉴스)		
	4.14	北 원산국제관광지구 공사 1년째 제자리걸음(자유아시아방송)		
	4.16	평양 인구 286만명...작년보다 소폭 증가(미국의소리)		
외교 국방	4.10	북한이 미사일 시험 계속하는 이유는?...美 비아냥에 반발(연합뉴스)		
	4.11	G7, 北핵실험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추가도발 말라(연합뉴스)		
	4.12	北리수용, 제재국면서 다음주 방미...무슨 의도일까(연합뉴스) 케리, 대북제재 강화...핵포기맨 평화협정-경제지원-통일 논의(연합뉴스) 北매체, 링컨 입 빌려 오바마에 “제재에 쓰러지지 않는다”(연합뉴스) 日방위상, “北 간부들, 잦은 인사에 위축...김정은 오판 가능성”(연합뉴스) 北, 국제사회 복핵 해법 논의에 “불평등한 대화는 배격”(연합뉴스) 美전문가, 北 신형 ICBM엔진 성공시 미국 동부까지 사정권(연합뉴스)		
		4.13	케리 미국무, 北 리수용 외무상과 회동계획 없어(연합뉴스) 中, 대북제재는 에누리없이 집행...정상관계도 유지한다(연합뉴스) 내달 G7정상선언에서도 가장 강한 표현으로 北도발 비난(연합뉴스) 北, KN-08 첫 발사로 美본토 타격 미사일 실전배치 수순 밟나(연합뉴스)	
			4.14	미국, 北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비 상황주시...팜 비상태세(연합뉴스) 中, 北 태양절 예술축전에 대표단 파견하지 않은듯(연합뉴스) 北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日, 경계에 만전(연합뉴스) 러 외무 “북, 핵·미사일 실험 등 무책임한 행보 자제해야”(연합뉴스) 38노스, 北 풍계리 꾸준한 활동...추가핵실험 가능성 배제못해(연합뉴스) 北, 원산일대에 무수단 탄도미사일 전개...이지스함 동해 급파(연합뉴스)
				4.15

4.16	中, 北 미사일 발사 어리석다..안보리결의 준수 촉구(연합뉴스)
	북, 러 극동 총영사관 나훗카에서 블라디로 이전(연합뉴스)
	北, 김일성 생일 중거리 무수단미사일 첫 발사 시도...실패한 듯(연합뉴스)
	美 "북한 미사일발사 실패했어도 안보리 결의위반" 강력 규탄(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실험 관련 "추가도발 때 중대 조치"(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4. 10.

■ 北김정은, 조선총련 산하 조선대 개교 60주년 축하문(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0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운영하는 조선대학교의 개교 60주년을 맞아 전체 교직원과 학생, 졸업생에게 축하문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하문에서 “조선대학교는 창립 후 지난 60년간 민족교육의 최고전당, 과학연구의 중심, 민족성 고수의 보루로서 (조선)총련의 조직 건설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평가함.
- 김 제1위원장은 “조선대학교는 시대와 조국 앞에 지닌 역사적 사명과 본분에 맞게 모든 학생들을 승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재일조선인운동의 핵심 골간으로,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로 키움으로써 존엄 높은 공화국의 해외 교포대학으로서의 권위와 명성을 계속 떨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 4. 14.

■ 北 김정은, 제7차 당대회 인민군 대표로 추대(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5월 초로 예정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의 대표로 추대됨.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4일 “조선노동당 조선인민군대표회가 4월 12일과 13일에 진행됐다”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대표로 높이 추대했다”고 보도함.
-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추대사에서 “최고사령관 동지께서 선군의 총대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핵강국의 전열에 높이 올려 세우신 것은 김일성 민족, 김정일 조선의 천만년 미래를 억척같이 담보해 주신 민족사적 대공적”이라고 찬양함.
- 이어 대표회에서는 김 제1위원장을 당대회 대표로 추대하는 결정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중앙방송은 밝힘.
- ‘김정은 시대’가 선포될 것으로 예상되는 7차 당대회에도 3천여명의 대표자가 참가할 것으로 관측됨. 북한은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해 5월 초로 예정된 당대회 준비 절차를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것으로 보임.

■ **北김정은, '태양절' 맞아 재일동포에 교육비 23억원 지원(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2억1천 880만엔(약 23억1천300만원)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 돈이 “재일동포 자녀들의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을 위한 것”이라며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지금까지 조선총련에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모두 162차례 보냈으며 이는 액수로 477억8천799만390엔에 달한다고 설명함.
- 김 제1위원장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로 심한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도 국가예산을 소진하며 재일동포 자녀 교육비를 지원한 것은 일본에서 조선총련 차세대의 충성심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이 나옴.

2016. 4. 15.

■ **北 김정은, 김일성 생일에 금수산궁전 참배(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자신의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104회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맞아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함. 조선중앙통신은 15일 “김정은 동지께서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번 참배에 조선인민군 지휘성원(간부)들이 함께 참가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이름은 언급하지 않음.
- 김 제1위원장은 집권 이후 해마다 김 주석 생일에 군 고위간부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 권력 강화 의지를 과시함. 한편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을 계기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북한 동향을 정밀 감시 중임.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4. 10.

■ **정부 당국자, 북한 정권 실세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연합뉴스)**

- 현재 북한 정권의 실세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이란 정부 당국자의 진단이 나옴.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현재 북한의 실세는 김원홍 보위부장”이라면서 “그는 보위부장이지만 인민보안부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정찰총국 업무도 일부 맡고 있다”고 말함.
- 최근 대북매체들은 “국가안전보위부가 인민보안부 관할 업무였던 일반 경제사범

까지 담당영역을 확대하는 등 권한이 커지고 있다”면서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제치고 김 보위부장을 '정권 2인자'로 꼽는 주민이 늘고 있다”고 보도함.

2016. 4. 15.

■ 북한군 리명수 총참모장,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연합뉴스)

- 북한 리명수(82) 총참모장이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중앙통신은 이날 김영춘·현철해 동지에게 인민군 원수 칭호가, 리명수 동지에게 인민군 차수 칭호가 수여됐다면서 “이와 관련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공동 명의로 된 결정이 14일 발표됐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들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각별한 신임과 사랑속에 인민군대 중요 직책들에서 오랜 기간 사업하면서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인민군대안에 당의 유일적령군체계를 철저히 확립하며 혁명 무력을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크게 공헌하였다”고 설명함.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튼튼한 국방을 통해 선대의 선군혁명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들의 상징성을 권력 강화에 활용하려는 인사”라고 해석함.

다. 공식행사

2016. 4. 13.

■ 북한, 5월 당대회 앞두고 시군별 당대표회 개최(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시군별로 당대표회를 진행함. 조선중앙방송은 13일 “조선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앞두고 시군 당대표회들이 진행됐다”며 행사에서는 시군 당위원회의 사업 총화(분석)와 도 당대회에 보낼 대표자 선거가 진행됐다고 보도함.
- 시군 당대표회에는 해당 당위원회에 소속된 기관, 기업소, 협동농장을 비롯한 각급 단위 당조직에서 선거된 대표자가 참석함.
- 방송은 이들 행사에서 “원수님의 말씀과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추진돼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경제 봉쇄와 고립 압살 책동 속에서도 자립경제의 위력이 뚜렷이 과시됐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밝힘.

2016. 4. 14.**■ 北, 김일성 생일 중앙보고대회…김정은 옹호보위(연합뉴스)**

-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을 하루 앞둔 14일 중앙보고대회를 열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과 다음 달로 예정된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위한 성과를 독려함. 관영 조선중앙TV는 이날 저녁 “김일성 동지 탄생 104돌 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됐다”며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모습을 녹화해 보도함.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대회 보고에서 “김일성 동지는 걸출한 수령이며 절세의 위인”이고 “4월15일은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은 민족 최대의 경사의 날”이라며 김 주석을 한껏 추켜세움. 이어 “김정은 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 보위하며 김정은 동지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하겠다”며 “제국주의 반동들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침략전쟁 책동과 온갖 비열한 압살 제재 소동을 물거품으로 만들어야 하겠다”고 강조함.
- 이날 대회에는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평해·최태복·최룡해·김영철·오수용 당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조연준 당 제1부부장, 김수길 평양시 당 위원회 책임비서,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함. 또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리명수 총참모장, 오극렬·리용무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등도 주석단에 오름.

라. 주요 기관 행위**2016. 4. 12.****■ 주중 북한대사관 류원산 사진 내리고 ICBM 사진 게재(연합뉴스)**

- 중국의 수도 베이징(北京) 도심에 있는 주중 북한대사관이 최근 대중 선전용 홍보게시판에 광명성 4호 로켓(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진을 게시함. 류원산(劉雲山)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의 방중 사진 등 북중우호를 상징하는 사진들이 사라진 사실도 확인됨.
- 연합뉴스가 12일 오후 베이징 도심에 있는 북한대사관 앞에 설치된 대외 선전용 홍보게시판을 살펴본 결과, 전체 21장의 사진 중에는 지난 2월 7일 발사된 광명성 4호 사진 2장과 ICBM인 KN-08 사진이 포함돼 있었음.
- 북한대사관은 이 사진에 대해 “자주적 국방공업의 위력을 과시하여 나아가는 조선인민군 기계화 종대”라는 설명을 붙여놓음. 북한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위성 발사는 모두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중국의 강력한 비난에도

대중 선전용 게시판에 버젓이 광명성-4호와 ICBM 사진을 다수 게재한 것은 중국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2016. 4. 13.

■ 北, 한국전쟁 무기 생산지에 김일성·김정일 동상(연합뉴스)

- 북한이 한국전쟁 당시 무기를 생산했던 평안남도 성천(成川)군 군자리(君子里)에 김일성·김정일 부자(父子)의 동상을 세움.
- 조선중앙통신은 13일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동상을 군자혁명사적지에 높이 모시었다”고 보도함. 지난 12일 진행된 동상 제막식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봉주 내각 총리, 리만건 군수공업부장, 박태성 평안남도 책임비서 등이 참석함.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꽃바구니를 보냄.
- 김영남 상임위원장은 제막사에서 동상을 세운 것은 “주체적 국방공업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혁명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며 당의 병진노선을 관철해나갈 천만 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열화같은 충정의 분출”이라고 말함.

■ 북한, 김일성 생일 앞두고 주민·기관 대거 표창(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앞두고 주민과 기관 등에 각종 상훈을 수여함.
-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은 지난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박길남, 김정숙제1중학교, 하당은하피복공장, 은하자재상사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했다고 13일 보도함.
- 또 자강도 우시군에는 모범지방공업군칭호, 모범적인 초급청년동맹위원회들과 청년동맹 일꾼들에게는 김일성청년영예상과 김일성소년영예상을 수여함.

2016. 4. 14.

■ 北, 김정은 지시한 백두산 3호 발전소 6개월만에 완공(연합뉴스)

- 북한이 5월 초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70일 전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가 완공을 앞둔 것으로 알려짐.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11일 발전소 언제(둑) 구역에서 가배수로 수문을 닫는 작업과 밀폐 공사가 단 3시간 만에 성과적으로 끝났다”면서 “련이어(연이어) 기본 언제의 물잡이(담수)가 시작되어 며칠 안으로 발전설비들의 총시운전을 보장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고 서두수에 또 하나의 새로운 인공호수가 생겨나게 되었다”고 14일 보도함.

- 신문은 “2호 발전소 가배수로를 밀폐한 때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또다시 3호 발전소 언저에서 가배수호가 밀폐되고 물잡이가 시작된 것은 백두산영웅청년들 격대원들과 련관(연관)단위 일군(일꾼)들, 로동계급의 백절불굴의 정신력이 낳은 결실”이라고 추켜세움.

2016. 4. 15.

■ 북한 노동자대회 참가 대표 2차 선발 취소(자유아시아방송)

-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리는 제7차 노동당 대회에 참가할 대표자에 대한 2차 선발이 돌연 취소됐다고 지난 1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보도함.
- RFA는 각 지방에서 당 대회에 참가할 지방별 대표자에 대한 1차 선발이 마무리됐고 이달 초 평양에서 2차 선발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당국이 이 일정을 돌연 취소했다고 평양의 취재 협력자가 아시아프레스에 말했다고 전함.
- RFA는 최대 1만 명에 달하는 1차 선발자들에게 제공할 숙식 준비 부담, 치안 문제, 당 대회 관련 정보유출 차단 등의 이유일 것이라고 RFA는 보도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4. 11.

■ 北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 4년…수령 결사옹위 독려(연합뉴스)

- 북한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추대(4월11일)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4월 13일) 4주년을 맞아 ‘수령 결사옹위 정신’을 강조하며 다음 달로 예정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위한 ‘속도전’을 다그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2012년 4월 김정은 동지를 조선 노동당 제1비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모신 것은 우리 당의 강화 발전과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 전환의 이정표를 마련한 정치적 사변이었으며 민족사적 대경사였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어 “수령 결사옹위는 우리의 제일 생명”이라며 “전체 군대와 인민은 우리 운명의 태양을 감히 가리워 보려고 극악무도한 도발 망동을 부리고 있는 미제와 온갖 원수들을 무자비하게 죽탕쳐 버릴 멸적의 기상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여야 한다”고 덧붙임.

■ **北, 70일 전투 참여 독려…당원들 반응은 미온적(연합뉴스)**

- 북한이 다음 달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벌이는 속도전인 70일 전투에 당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당원들 반응은 미온적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방송은 이날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중앙 당에서 당원들이 70일 전투에 더욱 모범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조하는 지시가 내려왔다”며 그러나 “기관별로 맡겨진 국가 대상 건설을 제외하고는 막상 특별한 일거리가 없어 많은 사람이 개인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고 밝힘.
- 소식통은 “당 자금을 적게 바치거나 당증을 분실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대중비판과 출당까지 거론되고 있다”며 “출당 조치를 당하면 자연히 당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출당 조치를 바라는 당원들도 있다”고 전함.

2016. 4. 13.

■ **北,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추대 4년 맞아 충성 다짐(연합뉴스)**

- 북한은 1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추대 4년을 맞아 김 제1위원장을 찬양하며 충성을 다짐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무궁강대하라, 수령복, 장군복이 넘치는 백두산 대국이여’라는 글에서 “2012년 4월13일 우리 군대와 인민은 주체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안고 원수님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높이 추대했다”고 밝힘.
- 신문은 “우리 민족이 맞이한 백두산형의 영장”인 김 제1위원장이 “강성국가 건설의 넓은 길을 열어나가며 나라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높이에 올려세워 그 위용을 만방에 떨쳐가고 있다”고 한껏 추켜세움. 그러면서 “원수님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 위업을 빛나게 이어 나가기에 백두산 대국의 수령복, 장군복은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해도 영원할 것”이라고 주장함.

2016. 4. 15.

■ **北, 김일성 생일 태양절 맞아 김정은에 충성 결의(연합뉴스)**

-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4회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맞아 김 주석을 찬양하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향한 충성을 다짐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1면 사설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해 억세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다”고 밝힘.
- 신문은 먼저 “수령님(김일성)께서 창건하신 주체적혁명무력은 반제반미대결전

의 역센 기둥이었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은 백전백승의 원천이었으며 주체적국방공업의 토대는 백두산대국의 승리전통을 담보하는 초석이었다”고 평가함.

- 이어 “원수님(김정은)은 백두산대국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원수님 영도따라 나아가는 백두의 행군길은 주체의 길, 승리의 길”이라며 “우리 운명의 눈부신 태양을 감히 가리워보려는 원쑤(원수)들을 무자비하게 격멸소탕해야 한다”고 촉구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조치

2016. 4. 10.

■ 北, 주민에도 외화상납 강요…부유층엔 외화-원화 강제교환(연합뉴스)

- 북한이 수개월 전부터 모금 명목으로 주민들로부터 외화를 징수하고, 3천 달러(약 346만 원) 이상의 외화를 보유한 부유층에 대해서는 북한 원화와 교환을 강요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10일 보도함.
- 이 신문은 북한 관계자를 인용해 노동당 하부기관이 '충성의 외화별이'라는 명목으로 매달 가구별 평균 10달러 정도를 징수하고 있다고 전함. 신문에 따르면 돈이 별로 없는 가구로부터도 수 달러, 신흥 부유층에는 그에 상응해 더 많은 외화를 거둬들이고 있음.
- 이는 다음 달 열리는 조선노동당대회의 축하 무드 조성 등에 필요한 외화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주민들은 모금 강요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신문은 전함. 3천 달러 이상의 외화를 보유한 개인에 대해 북한 화폐와 강제교환하도록 한 것은 올 1, 2월 들어서임.

다. 경제 상황

2016. 4. 14.

■ AP통신, 북한 휘발유값 3월에 14% 급등…대북제재 등 영향(연합뉴스)

- 북한의 휘발유 가격이 최근 급등했다고 AP통신이 14일 평양발로 보도함. AP가 지난 9월 이후 평양 시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휘발유 가격을 직접 조사한 결과

- 연초 가격 변화가 없다가 2월 소폭 내린 후 3월에 14% 급등해 이달 초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북한의 공식 휘발유 가격은 kg당 80원이지만, 실제로 이 가격을 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AP는 설명함. AP는 이번 휘발유 가격 상승이 북한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력해진 가운데 나왔으며, “북한의 초기 시장 경제 속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던 사업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함.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4. 10.

■ 집단탈출 추정 中 Ningbo 북한식당 “내부조정 문제로 영업중단”(연합뉴스)

-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한 곳으로 추정되는 중국 저장(浙江)성 Ningbo(寧波)에 있는 북한식당인 류경식당은 9일 현재(식당)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 이 식당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냐’는 질문에 “현재 식당이 내부조정 중”이라며 이같이 대답함. 식당이 현재 리모델링 중이거나 내부 사정으로 영업을 잠시 중단했다는 뜻으로 해석됨. 그러나 ‘영업이 언제 재개되느냐?’는 질문에는 “나도 잘 모른다”고 대답함.
- 중국기업과 합작형태로 운영돼온 류경식당은 며칠 전 갑자기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이 식당 관계자는 KBS와의 접촉에서 종업원들이 5일 밤, 6일 새벽 사라졌다고 말함. 이로 미뤄 북한 해외식당에서 집단 탈출해 귀순한 종업원 13명이 종적을 감춘 곳이 바로 류경식당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옴.

■ 日언론, 북한 광물 실은 트럭 여전히 중국으로 들어가(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가 대북제재 방안으로 북한으로부터의 광물수입을 금지한 이후에도 북·중 국경에서는 광물로 보이는 물자를 가득 채운 북한 트럭이 중국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0일 전함. 마이니치가 입수한 지린(吉林)성 허룽(和龍)시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지난 7일에도 중국 기업이 북한의 광물을 반입하는 모습이 담김.
- 마이니치에 따르면 화면에는 북한의 대형 트럭 한 대가 세관 검사를 받은 뒤 허룽시 난핑(南坪) 쪽으로 나와 비슷한 대형트럭 13대와 합류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북한 쪽에서 다른 트럭도 다리를 건너 중국 쪽으로 오는 모습도 있음.
- 마이니치는 "중국은 완전히 민생목적의 경우 핵·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이 없음이 증명되는 것은 수입금지에서 제외했다"며 "중국이 광물 적재량이 많지 않고 지급액도 적을 경우 '민생 관련'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 **제재 한달 국제사회 '北기피' 구체화·해운·금융·교류차단(연합뉴스)**

-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 국제사회의 북한 '보이콧'이 점차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활동과 연관된 교역·금융거래·인적교류 등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규제한 안보리 결의 2270호가 채택 한 달을 넘기면서 구체적인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임.
-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해운 차단, 북한의 금융거래 제한, 불법활동 연루 북한 인사 추방, 북한 연수생 초청 취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보리 결의가 이행되고 있다"고 밝힘. 정부가 제재 효과에 가장 주목한 분야 중 하나는 북한의 해운 활동 통제임.
- 외국 정부 및 기관들의 북한 기피 현상은 금융거래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보임. 외교부 당국자는 유엔 회원국 내 북한 금융기관의 활동을 90일 내 전면 금지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 조항을 들며 "북한과 거래관계가 있던 해외 금융기관들이 대북 금융거래에 소극적 자세를 보여 북한이 국제 금융거래에서 장애를 받고 있다"고 소개함.

2016. 4. 12.

■ **北, 개성공단 의류제품 중국 상점에 판매 시도(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2월 한국 기업이 개성공단에서 철수하면서 현지에 남겨둔 의류 제품을 북한이 중국 변경도시 상점에 판매하려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중국 선양(瀋陽)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한 조선족 소식통은 RFA에 "얼마 전 북한 사람이 매장을 방문해 개성공단에서 만든 의류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지 타진해 왔다"고 밝힘.
- 이 소식통은 "개성공단 제품이라면 품질은 좋을 테니 구입하고 싶었지만 아무래도 정치적 문제가 걸려있는 제품이라는 게 마음에 걸려 생각해보겠다고만 하고 그냥 돌려보냈다"고 덧붙임.

■ **돈줄막힌 북한, 문화재도 중국시장에 내다팔기 시작(연합뉴스)**

- 한동안 거래가 끊겼던 북한 문화재가 최근 중국 골동품시장에 나돌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상하이의 한 대북 소식통은 12일 "최근에 북한 문화재가 중국에 나돌고 있다"며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기업이나 인사들이 돈줄이 쪼이자 밀반출이 쉬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서화 등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북한 기업이나 식당 등이 해외 활동자금이 부족해지자 팔 수 있는 것들은 마구잡이로 내다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임. 북한 문화재는 중국내 광범위한 수요층을 바탕으로 1990년대 북한 문화재의 해외 유출과 북한 내 유적지 도굴이 성행하면서 큰 붐을 일으킴. 1998년에는 북한에서 출토된 고려청자, 분청사기, 서화, 청동기 등을 밀반출해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판매해온 북한 문화재 전문 밀매단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함.
- 특히 유엔 대북제재 결의 대상에는 북한 문화재나 골동품은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도 최근 북한 문화재가 중국에서 재각광 받는 이유로 꼽이됨.

2016. 4. 13.

■ 대북제재 결의에도... 1분기 북·중 무역액 12.7% 증가(연합뉴스)

- 중국과 북한의 1분기 교역액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등 각종 악재에도 전년 동기에 비해 두 자릿수 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중국 당국은 이에 대해 “대북 제재 집행 전의 통계”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함.
- 황쑹평(黃頌平)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대변인은 13일 오전 베이징(北京) 국무원 신문관공실에서 열린 중국의 1분기 무역통계 설명 기자회견에서 1~3월 북중교역액이 총 77억 9천만 위안(약 1조 3천7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했다고 밝힘. 대북 수출액은 39억 6천만 위안으로 14.7% 증가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액은 38억 3천만 위안으로 10.8% 늘었음.
- 황 대변인은 “중국의 주요 대북 수출품은 기계 전자제품, 노동집약상품, 농산품 등이었고 수입품은 주로 석탄, 철광석 등이었다”고 설명함. 황 대변인은 또 중국은 지난 5일 대북제재 이행 방안을 발표하고 즉각 제재 이행에 돌입했다며 “이번 1분기 북중교역 통계는 대북제재와 관련이 없다”고 말함. 또 “해관총서는 유엔 결의를 엄격히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함.

■ 北해외식당은 돈세탁 창구, 中 매체 집중조명(연합뉴스)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귀순사건을 계기로 중국 인터넷 매체가 북한의 해외식당의 실태를 집중 조명해 눈길을 끌고 있음. 중국 싸우후(搜狐)망은 13일 군사사이트 테취(鐵血)군사망 블로그에 올라온 ‘당신이 몰랐던 북한 해외식당, 김치, 가무, 돈세탁?’이란 제목의 게시글 전문을 소개함.
- 보도에 따르면 북한 식당은 전 세계 약 25개 국가에서 100여 개 이상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체로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집중돼 있지만, 러시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도 존재함.
- 이 사이트는 한 스웨덴 기자의 과거 보도를 인용, 북한의 해외 식당은 노동당

39호실이 벌이는 사업 가운데 하나라고 전함.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 창구로 알려진 노동당 39호실은 현금수입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벌이는 탓에 북한 식당의 음식값이 매우 비싼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함. 노동당 39호실은 마약 밀수, 위폐 제조 등도 함께하고 있어 해외 식당 운영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금 조달을 위한 필수적인 톱니바퀴 중 하나라고 이 사이트는 설명함.

■ 미얀마 북한 식당도 폐점 위기(자유아시아방송)

- 대북제재로 북한의 해외 식당들이 심한 경영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얀마 양곤의 북한 식당도 폐점 위기에 놓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 RFA는 현지 한국인 교민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최근 이 식당(평양 고려식당)의 손님이 확연히 줄었으며 비싼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곧 폐점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고 전함. 특히 지난 9일 시작해 20일까지 진행되는 미얀마의 설날인 떤잔 기간에 모든 식당이 문을 닫는 것도 경영난 악화를 부채질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함.
- RFA는 미얀마 외에도 중국 주하이(珠海)의 북한 식당 설봉도 경영난으로 한두 달 전에 문을 닫았다고 전함.

2016. 4. 14.

■ 중국내 북한식당, 합작 기반으로 영업난 버텨(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내 북한 식당들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로 극심한 영업난에 시달리면서도 문을 닫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중국인과 합작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옴.
- 중국 단둥(丹東)의 한 소식통은 1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식당들은 대부분 중국인과 합작형태로 문을 열거나 건물을 임대받는 경우가 많아 건물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힘. 소식통은 또 “식당 내 북한인 종업원들은 인건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중국인이) 지급을 미뤘다가 (북한으로) 귀국할 때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인건비에 대한 압박도 받지 않는다”고 설명함. 그러면서 “북한 식당과 합작하는 중국인은 대부분 북한과 거래하는 무역업자들로 (북한 식당) 건물 임대료를 책임져 주는 대신 북한과의 무역에서 (북한 측으로부터) 특혜를 받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임.

2016. 4. 15.

■ 北, 합영회사 통해 中에 광물수출...대북제재 허점(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중국과의 합영회사를 통해 중국에 광물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현지소식통을 인용해 15일 보도함.
- 북수의 양강도 소식통은 “안보리 대북제재에 참여한 중국이 북한으로부터 광물과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해중광업합영회사를 통한 북한의 대중국 광물 수출은 오히려 늘었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함. 해중광업합영회사는 북한 양강도 혜산청년광산이 49%, 중국 완상자원유한공사가 51%의 지분을 투자해 2007년 설립한 합영회사로, 2011년 9월부터 구리 생산을 시작해 15년 동안 공동경영을 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함.
- 양강도 소식통은 “70일 전투에 돌입하면서 혜산청년광산이 정광 생산량을 기준의 한 달 3백 톤에서 4백 톤으로 늘렸다”며 “혜산청년광산에서 생산된 구리 정광은 해중광업합영회사를 통해 모두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고 말함.

■ 북한, 북중 경협재개 의지 표명...경제지대 등 개발 기대(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 집권 이후 북중 관계가 수년째 얼어붙은 가운데 북한과 가장 가까운 중국 랴오닝(遼寧)성을 관할하는 주 선양(瀋陽) 북한총영사가 이례적으로 북중경협 재개 의지를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림.
- 15일 선양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구영혁 북한 선양총영사는 지난 13일 선양 시내 호텔에서 열린 태양절(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 축하연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조중(朝中·북한과 중국)우호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지 55돌이 되는 해”라며 “조중우호관계를 계속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함.
- 구 총영사는 이어 “랴오닝성 정부가 평안북도-랴오닝성 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보다 강화하고 압록강 새 다리(신압록강대교) 건설과 두 경제지대 개발사업을 적극 추동하기 위해 계속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中 관영언론, 北식당 집중조명...불안한 미래 직면(연합뉴스)

- 북한의 해외식당이 대북 제재와 직원들의 집단탈출 사건 등으로 불안한 미래에 직면했다고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가 15일 보도함.
- 이 신문은 중국 공산당을 대변하는 인민일보(人民日報)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영문판으로, 민감한 외교 사안에 대해 중국 당국의 의중을 담는다는 점에서 주목됨.

- 신문은 12~13면 2면에 걸친 장문의 기사에서 “북한이 외화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해 온 해외식당들이 한국정부의 식당 출입 자제령 이후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인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함. 그러면서 최근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출 사건의 뒤에 이 같은 제재로 인한 운영난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을 곁들임.

2016. 4. 16.

■北, 2월 중국산 비료수입 급증...제재 대비한 듯(미국의소리)

-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이후 대북 제재에 대비해 중국산 비료를 대량으로 수입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국내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16일 밝힘.
-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 동북아연구원장은 이날 중국 해관총서의 자료를 인용해 “북한은 지난 2월 중국으로부터 7만 9천t이 넘는 비료를 수입했다”면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45t을 수입한 것과 비교해 84배 이상 증가한 규모”라고 주장했다고 방송은 전함.
- 북한이 지난해 1~2월 중국에서 수입한 비료가 4천4백여 t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올해 중국산 비료의 수입 증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옴. 권태진 원장은 북한에서는 보통 옥수수과 감자를 파종하거나 작물을 이양하는 4~6월에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이 서둘러 비료를 대량 수입한 것은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4. 11.

■北, 중국내 무역일꾼 단속·탈북루트 경비 대폭 강화했다(연합뉴스)

- 중국에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탈북하는 이례적인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당국이 중국 내 외화벌이 일꾼들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 선양(瀋陽)의 한 조선족사업가는 11일 연합뉴스와의 접촉에서 “중국측 파트너를 접대하기 위해 가끔 북한식당을 찾는데 최근 집단탈북 때문에 여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사상교육이 심해져 ‘파편이 엉뚱한데 떨어졌다’는 불만을 쏟아냈다”고 전함. 이 사업가는 또 “여종업원들이 잠잘 때도 3~4명 당 1명 꼴로 감시인이 붙는 등 틀에 짜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바깥 출입도 마음대로 못하는데다 최근에는 외출도 금지됐다고 한다”고 말함.

- 북한 내에서는 최근 해외식당 종업원, 무역상 등 예비 외화벌이 일꾼들에 대한 사상교육도 대폭 강화됐다는 관측이 나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북 사건 이후 북중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북한군인들의 순찰주기가 짧아지고 경비병력이 늘어나 기존의 탈북루트가 사실상 차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도 제기됨.

나. 시장관련

2016. 4. 10.

■ 北, “제재 이후 상품값 내려…자립경제 갖췄다” 주장(연합뉴스)

- 해외식당의 종업원이 집단 탈출하는 등 대북 제재가 북한 경제에 실질적 타격을 줬다는 신호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북한 매체는 자강력을 내세우며 오히려 주민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침.
- 북한의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는 9일 ‘제재 효과에 대한 생각’이라는 제목의 수필 형식 글에서 식료품점에서 나오는 여성들의 달걀 가격에 대한 대화 내용을 소개함. 한 여성이 “닭알(달걀)값이 왜 이렇게 녹았을까?(내렸을까)”라고 묻자 다른 여성은 “닭공장에서 팡팡 생산되니까 그러겠지요”라고 답함.
- 이 매체는 “인민들은 지난 수 십 여년간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봉쇄 속에서도 자강력의 기치를 높이 들고 자립경제 토대를 갖추어왔다”며 “부당한 제재의 회오리는 몰아쳐도 인민 생활에 더욱 편리한 조건들이 지어지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제재로 북한 장마당 물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 상황이 악화하면서 내부 동요가 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됨.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4. 10.

■ 핵심힘 돈으로 쌀이나 달라…대북제재로 北내부 불만 팽배(연합뉴스)

- 북한 주민 사이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 고개를 드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10일 전해짐.
-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상황이 악화하면서 북한 주민의 불안과

불만 등이 사회동요로 이어질 수 있는 움직임이 일부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의 주민여론과 관련한 첩보를 일부 공개함. “핵 실험에 쓸 돈으로 쌀 한 자루씩 공급 해주면 절을 하겠다’거나 ‘배급도 안 주면서 위성은 무슨 위성이나’는 주민여론 관련 첩보가 있다”면서 “이는 여러 경로로 확인된 사항”이라고 말함.

- 이러한 첩보는 제4차 핵실험 이후 북-중 무역이 쪼그라드는 등 경제적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도, 다음달 초로 예정된 7차 당대회 준비를 위해 무리한 상납금과 노력동원을 강요하는 지도부의 모습에 북한 주민들의 민심이 돌아서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2016. 4. 13.

■ 대북제재에도 외국인 북한관광은 계속(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외국인의 북한 관광은 계속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함. 폴 치아 네덜란드의 투자자문회사 GPI컨설턴시 대표는 “네덜란드 기업인들이 다음 달 23~28일 북한을 방문해 농업, 의류, 만화, 관광 등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지 않는 분야에서 북한과 협력사업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함. 치아 대표는 8월 언론인의 북한 관광도 계획돼 있다고 덧붙임.
- 딜런 해리스 영국 루핀여행사 대표도 북한 최대의 명절인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4월15일)을 전후해 예정대로 북한 관광을 진행하며, 올해 가을에는 제6회 아마추어 골프대회도 북한에서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말함. 이밖에 영국 여행사인 폴리틱얼 투어스, 중국의 고려여행사도 예년처럼 외국인 관광객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했거나 방문할 계획임.

2016. 4. 14.

■ 北 원산국제관광지구 공사 1년째 제자리걸음(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국제적인 관광도시 조성을 목표로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구' 건설 사업이 1년 가까이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함. 북한 전문가인 커티스 벨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RFA에 출연, 지난 2월 26일 촬영된 원산시 갈마거리의 위성사진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힘.
- 벨빈 연구원은 “지난해 (국제관광지구에 대한) 준공식이 크게 보도된 이후 거의 진척이 없다고 볼 수 있다”며 “일부 지역에 2건의 건물 공사만 진행됐는데, 그것도 1층 공사만 이뤄졌을 뿐”이라고 설명함.

2016. 4. 16.**■ 평양 인구 286만명…작년보다 소폭 증가(미국의소리)**

- 올해 평양 인구가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286만명으로 추산된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민간 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16일 보도함. 방송은 이날 미국의 민간기구 ‘데모그라피아’가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인용해 “올해의 평양 인구는 지난해 285만명에서 소폭 증가했다”면서 “(평양이) 전 세계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 1천22개 가운데 162위를 기록했다”고 밝힘.
- 이어 청진이 인구 63만명으로 794위, 함흥이 54만5천명으로 937위를 기록, 북한에 인구 50만명이 넘는 도시가 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이 방송은 설명함. 방송은 “인구 50만명 이하 도시로는 남포(36만여명), 신의주(30만여명) 등으로 추산됐다”면서 “북한 대도시들은 전체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인구 밀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임.

4. 외교국방**가. 북·미 관계****2016. 4. 12.****■ 北리수용, 제재국면서 다음주 방미…무슨 의도일까(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압박이 강도를 더해가는 상황에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전격적으로 미국 방문 의사를 밝히면서 북한의 의도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음.
- 유엔의 스테판 두자릭 대변인은 11일(현지시간) “리 외무상이 22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파리 기후변화 협정 서명식에 참석한다”고 밝힘. 리 외무상이 뉴욕을 방문하는 것은 작년 9월 유엔총회 참석 이후 7개월 만이며,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에 130여개 회원국이 서명하는 자리임. 각국의 장관급 인사가 참석하는 만큼 전문가들은 대북제재를 주도해 온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과 리 외무상의 만남이 성사될 것인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 리 외무상의 이번 방문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김정은 체제가 견재하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더 클 것이란 해석도 있음. 한 대북 소식통은 “제재와 고립 속에서 자신들이 아직 견재하다는 이미지를 세계에 보이려는 목적이 가장 커 보인다”면서 “방미 전 사전 대화도 실무적 수준에 그쳤을 공산이 큰 만큼 북미대화가 성사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함.

■ 케리, 대북제재 강화·핵포기맨 평화협정-경제지원-통일 논의(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넘어서는 강력한 추가 제재 방침을 시사함. 그러나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비핵화에 나설 경우 평화협정과 경제적 지원, 한반도 통일 등 모든 사안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보임.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 중인 케리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이같이 밝힘.
- 미 국무부가 공개한 발언록에 따르면 케리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모두(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몇 개월간 자행한 도발적 행동에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동시에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도발적 언행을 삼가고 대신 비핵화의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고 말함.
- 케리 장관은 대북 제재 강화 조치와 동시에 비핵화 시 얼마든지 북한과의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는 점도 거듭 밝힘. 케리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과 불가침 조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고 경제적 지원과 북한의 국제사회 복귀를 환영할 준비도 돼 있다. 만약 원한다면 한국과 통일 문제에 대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북한에 달렸다. 북한이(6자회담 당사국의 합의대로 진정한) 비핵화 협상에 응하겠다는 결정을 해야 가능하다”고 역설함.

■ 北매체, 링컨 입 빌려 오바마에 “제재에 쓰러지지 않는다”(연합뉴스)

- 북한이 에이브러햄 링컨 전 미국 대통령의 입을 빌리는 형식을 통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함. 북한의 대외선전용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2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링컨이 오바마에게 하는 충고’ 제하의 가상의 편지를 통해 북한이 제재나 봉쇄로 쓰러지지 않는다고 주장함.
- 조선의 오늘은 가상의 편지에서 링컨이 오바마에게 “그 나라(북한)를 반대하여 결정한 제재 결의안을 두고 유엔 역사상(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이라는 소리까지 울려나오게 하였다니 참 답답하구만”이라면서 “그 나라는 결코 제재나 경제 봉쇄로 거꾸러질 나라가 아니네”라고 말했다고 전함.
- 이 매체는 그러면서 “세계를 비핵화하자면 무엇보다 수많은 핵무기를 본토와 세계 곳곳에 배치해(배치해) 놓은 미국의 비핵화부터 실현해야 하는게 응당한 절차”라고 주장함. 이 매체는 또 “미국이 동방의 자그마한 국가의 절반을 70년 넘게 가로 타고 앉아 60년이 넘게 핵위협을 가하면서 그 지역의 정세와 평화, 안정을 해치고 그곳 민족의 발전을 유린하는 것은 정말 너무하고 치졸해서 차마

보지 못하겠네”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기도 함.

2016. 4. 13.

■ 케리 美국무, 北 리수용 외무상과 회동계획 없어(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다음 주 뉴욕 유엔본부를 방문하는 리수용 북한 외무상과 회동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짐.
- 리 외무상의 방미에 정통한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12일(이하 현지시간) “케리 장관이 리 외무상과 회동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힘.
- 미국 국무부는 두 사람의 회동계획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2016. 4. 14.

■ 미국, 北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대비 상황주사·관 비상태세(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이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은 “미국 정부도 한국 정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정보수단을 활용해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현재로는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함.

2016. 4. 15.

■ 美하원 외교위원장, 北정권 돈줄차단이 가장 중요(연합뉴스)

-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면 북한 정권의 돈줄을 확실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 로이스 위원장은 미국이 2005년 북한과 거래하던 마카오의 은행 방코델타아시아(BDA)를 직접적으로 제재해 상당한 효과를 봤다면서 “당시 북한의 모든 회의는 ‘언제 우리가 이 제재로부터 풀리는 것이냐’는 것으로 시작됐다”고 말함. 또 “북한의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에 관여했던 인사 등 여러 탈북자의 말을 종합하면 당시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회전계 등 관련 장비들을 구입할 수 없었다”면서 “독재자 김정은은 당시 군 간부들에게 돈을 줄 수도 없었다. 독재자에게 이런 상황이 오래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임.
- 로이스 위원장은 이어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에 대한 북한 정권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라면서 자신이 주도해 만든 대북제재 강화법에도 이런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함.

2016. 4. 16.**■ 美, “북한 미사일발사 실패했어도 안보리 결의위반” 강력 규탄(연합뉴스)**

- 미국은 15일(현지시간) 북한이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처음 시험 발사하려다 실패한 것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미사일 실험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들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고히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함.
- 국무부도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국 대변인의 명의로 보낸 논평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의 이용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배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힘.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격하고 재앙적인 시도로서,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고 비판함.
- 파란 하크 유엔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걱정스러운 것”이라며 “우리는 다시 한번 북한에 대해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힘.

나. 북·중 관계**2016. 4. 13.****■ 中, 대북제재는 에누리없이 집행…정상관계도 유지한다(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13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상황 속에서도 1분기 북중 교역액이 증가한 것과 관련,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겠지만, 북한과의 정상적 관계는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 대한 유엔의 대북 제재가 시행되는 상황인데 어째서 1분기 북중 교역액이 증가한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우리는 엄격하고 한 치의 에누리도 없이 집행할 것”이라고 말함. 또 “이것은 조금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덧붙임.
- 루 대변인은 그러나 “안보리 제재 결의의 틀 밖에서 중국은 조선(북한)을 포함해 다른 국가들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는 (다른 국가들이) 전혀 논박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함.

2016. 4. 14.

■ 中, 北 태양절 예술축전에 대표단 파견하지 않은듯(연합뉴스)

- 중국이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맞아 개최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제30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 첫 공연이 12일 평양 시내의 극장들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이름있는 국제·국내 콩쿨(콩쿠르) 수상자들, 관록 있는 명배우들로 구성된 예술단, 교예단들과 해외동포 예술단들은 백두산 절세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다함 없는 흠모의 정을 숭고하고 아름다운 예술의 화폭으로 펼쳐보였다”고 13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러시아를 비롯 쿠바와 페루, 베트남, 스페인, 말레이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이탈리아, 프랑스, 키프로스, 몽골, 태국 대표단 등이 평양시내 봉화에 술극장과 평양대극장, 동평양대극장, 모란봉극장, 김원균 명칭 음악종합대학 음악당, 평양교예극장 등에서 공연했다고 밝힘.
- 하지만 중앙통신은 중국 대표단의 참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음. 중앙통신의 보도로 미뤄볼 때, 중국이 올해 봄 친선예술축전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2016. 4. 15.

■ 中, 北 미사일 발사 어리석다..안보리결의 준수 촉구(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15일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추정되는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것과 관련, “각국 모두가 안보리 결의를 엄격히 준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힘. 중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관영 신화통신은 “어리석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함.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 문제에 관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함. 또 “현재 반도(한반도) 상황은 복잡하고 민감하다”며 관련 국가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피하고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촉구함.
- 신화통신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경솔하고 어리석다(ill-advised, unwise)’는 제목의 영문 논평을 통해 “불과 100일 동안에 북한은 핵실험, 탄도미사일 실험을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는 위성발사를 진행했다”고 거론하고서 북한이 이에 대한 대북 제재를 ‘악의’로 보는 것은 “분별없는” 짓이라고 규정함.
- 한편, 루 대변인은 이날 중국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 북한에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느냐는 물음에 “중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우호적인 이웃국가로, 우호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대답함.

다. 북·일 관계

2016. 4. 12.

■ 日방위상, “北 간부들, 잦은 인사에 위축…김정은 오판 가능성”(연합뉴스)

-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체제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해 잦은 인사를 하는 것이 결국 그가 오판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12일 지적함.
- 일본 방위성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빈번한 북한 요직 인사가 “김 제1위원장 자신을 유일한 지도자로 하는 체제 강화, 고삐 조이기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런 빈번한 인사이동에 따르는 위축 효과로 간부가 김 제1위원장의 판단에 다른 의견을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북한이 충분한 외교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군사적 도발 행위로 치달을 가능성도 생기고 있다”고 밝힘.

2016. 4. 14.

■ 北 미사일 발사 가능성에 日, 경계에 만전(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1~2기가량 전개한 것으로 알려지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
- 나카타니 겐(中谷元) 방위상은 14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추가 도발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정세를 주시하고,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함.
-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도 기자들에게 “북한의 핵·미사일에 관해서는 정부도 중대한 관심을 갖고 평소 정보 수집과 분석을 하고 있다”며 “자위대도 필요한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함.

라. 북·러 관계

2016. 4. 14.

■ 러 외무 “북, 핵·미사일 실험 등 무책임한 행보 자제해야”(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에 핵·미사일 시험 등의 무책임한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거듭 촉구함.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몽골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

아 외무장관은 14일(현지시간) 몽골 외무부에서 한 강연에서 “북한이 유엔 안전 보장이사회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핵·미사일 실험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새로운 무책임한 행보를 자제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함.

- 동시에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는 희망의 허망함을 깨닫길 바란다”고 지적함. 이어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국제적 정치·경제 활동으로 완전히 복귀하는 것이 스스로의 이익에 부합하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주권을 실현하는 조건을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함.
- 라브로프는 그러면서도 “북한의 행동을 동북아 지역의 군비 강화를 위한 부적절하고 비대칭적인 대응의 명분으로 삼으려는 시도도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며 미국을 겨냥함.

2016. 4. 15.

■ 북, 러 극동 총영사관 나훛카에서 블라디로 이전(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 극동 지역 총영사관을 나훛카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공식 이전함.
-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은 15일(현지시간) 러-북 양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었음. 개관식에는 림청일 북한 총영사를 비롯해 이고리 푸슈카료프 블라디보스토크 시장, 이고리 아가포노프 러시아 외무부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부 대표, 연해주 주정부 인사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블라디보스토크가 연해주의 주도로 극동 지역 행정·경제 중심지로 부상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도시인 나훛카에 있던 공관을 이곳으로 이전한 것으로 전해짐.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4. 11.

■ G7, 北핵실험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추가도발 말라(연합뉴스)

-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 외무 장관들은 11일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힘. G7 외무장관들은 외무장관 회의 최종일인 이날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회의 폐막과 함께 발표된 공동성명(Joint Communique)에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위한 여건을 만들어내고 모두에게 더 안전한 세계를 추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재확인한다”며 “북한의 1월6일 핵실험과 2월7일, 3월10일, 3월

- 18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비난한다”고 밝힘.
- 또 “이들 거듭되는 (북한의) 도발 행동은 지역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국제 평화 및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것으로, 여러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함.
 - 이어 “북한에 대해 앞으로 어떠한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도 하지 말 것과, 그 외 불안정을 가져오는 행동과 도발적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임.

2016. 4. 12.

■ 北, 국제사회 북핵 해법 논의에 “불평등한 대화는 배격”(연합뉴스)

- 북한은 12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데 대해 “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지만 불평등한 대화는 철저히 배격한다”는 입장을 내놓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최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일부에서 6자회담이니,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의 병행 추진이니 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대변인은 “일방적인 압력 하에서는 절대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시종일관한 원칙적 입장”이라고 덧붙임.
- 대변인은 이어 “대화란 당사자들 사이의 호상존중과 평등을 생명으로 하는 수단”이라며 “대화과 군사적 위협, 대화와 제재는 결코 양립될 수 없다”면서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국제 사회의 대북제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냄.
- 또 “미국의 가증되는 적대행위로 우리 핵문제는 이미 대화탁을 떠난 지 오래”라며 “우리가 내놓았던 합동군사연습 중지 대 핵시험 중지 제안도 미국 스스로가 날려 보낸 조건에서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됐다”면서 현재의 한반도 정세 악화를 미국 탓으로 돌림.

2016. 4. 13.

■ 내달 G7정상선언에서도 가장 강한 표현으로 北도발 비난(연합뉴스)

- 최근 열린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회의에 이어 내달 G7 정상회의의 결과물에도 북한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문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 정부는 내달 26~27일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종료 때 발표할 정상선언에 올해 들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반복한 북한에 대해 어떤 문구를 넣을지에 대한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13일 보도함.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가장 강한 표현으로 비난한다”는 문구를 축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산케이는 소개함.

2016. 4. 16.

■ 유엔 안보리, 北 미사일실험 관련 “추가도발 때 중대 조치”(연합뉴스)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15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이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추가 도발 때 중대한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채택함. 이날 안보리는 별도의 회의를 소집하지는 않았지만 미국, 한국 등의 요구에 따라 15개 회원국이 서명해 언론성명을 채택됨. 언론성명은 결의안, 의장성명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안보리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 하나 된 목소리를 내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음.
- 안보리는 성명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안보리 결의안 1718호(2006년), 1874호(2009호),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2270호(2016년) 위반이라고 밝힘. 안보리는 이어 북한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중대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임. 안보리는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평화롭고, 외교적이며, 정치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를 강조함.
- 유엔 관계자는 안보리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은 채 언론성명을 채택한 것은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며 특히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이 중국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4. 10.

■ 북한이 미사일 시험 계속하는 이유는?...美 비아냥에 반발(연합뉴스)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을 계속 되풀이하는 까닭은 미국의 반응이 불만족스러운 데 있다는 관측이 나옴.
- 9일(현지시간)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제프리 루이스 미국 비확산센터 소장은 “북한이 미사일을 만들 때마다 사정거리는 자꾸 길어질 것”이라고 내다봄.
- 루이스 소장은 “미국으로부터 비아냥을 받는 데 싫증이 나서 자기네 생각을 강요하려고 하는 의도가 역력하다”고 평가함.

2016. 4. 12.

■ 美전문가, 北 신형 ICBM엔진 성공시 미국 동부까지 사정권(연합뉴스)

- 북한에서 최근 지상분출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의 최종 개발이 이뤄진다면 KN-08이나 KN-14같은 미사일의 사거리가 미국 동부 지역까지로도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미국 항공우주연구기관 에어로스페이스의 존 실링 연구원은 11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이 공개한 모습의 로켓엔진을 이들 ICBM에 500kg 정도의 탄두와 함께 장착한다고 가정할 때 사거리가 1만1천~1만3천km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함.
-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이 지금까지 대체로 KN-08의 전력화 시점을 2023년 전후로 예상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새 로켓엔진이 순조롭게 개발됐을 때 KN-08의 전력화가 3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임.
- 실링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에 보여준 로켓엔진 개발 수준에 대해 “자신들이 한 ICBM 위협을 실현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불쾌한 진전”이라고 평함. 다만 KN-08 무게의 3분의1 정도인 SS-N-6에 쓰이는 로켓보다 더 큰 로켓을 아직 북한이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실링 연구원은 덧붙임.

2016. 4. 13.

■ 北, KN-08 첫 발사로 美본토 타격 미사일 실전배치 수순 밟나(연합뉴스)

-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됨. 미국 CNN 방송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북한이 이동식 발사대(TEL)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징후가 포착됐으며 KN-08과 무수단미사일의 발사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함. 이와 관련해 우리 군 관계자는 13일 “북한이 언제든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이 이번에 KN-08을 쏜다면 이는 첫 번째 시험발사가 됨. 북한은 2013년 4월 15일 김일성 생일 기념 열병식에서 KN-08을 처음 공개했지만 시험발사를 한 적은 없음. 이를 근거로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KN-08을 실전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
- 군 관계자는 “북한은 국제사회로부터 핵 능력을 인정받고자 핵투발 수단인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함.

2016. 4. 14.

■ 38노스, 北 풍계리 꾸준한 활동…추가핵실험 가능성 배제못해(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의 핵실험장에서 꾸준히 활동이 포착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가 13일(현지시간) 지적함.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한이 지난 1월 네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곳임.
- 38노스는 지난 9일과 11일 촬영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풍계리 핵실험장 북쪽 갯도 입구 부근에서 소형 차량의 모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등의 활동이 포착됐으며 “이곳에서 꾸준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함.
- 38노스는 앞으로 며칠 안에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것이라는 증거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오는 15일을 기념하겠다고 하며 추가 핵실험 같은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든 추가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의견을 보임.

■ 北, 원산일대에 무수단 탄도미사일 전개…이지스함 동해 급파(연합뉴스)

- 북한이 강원도 원산 일대에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1~2기 가량 전개했으며 군 당국은 발사에 대비해 이지스구축함을 동해로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짐.
- 한미 군 당국은 북한이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4월15일)을 계기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북한 동향을 정밀 감시 중임.
- 북수의 정부 소식통은 14일 “북한이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 무수단 미사일을 전개한 것이 식별됐다”면서 “북한이 20여일 전에 이 미사일을 전개한 이후 아직 철수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김일성 생일을 계기로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정은은 지난달 15일 핵탄두 폭발시험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탄도로켓 시험발사를 단행하라고 지시했다”며 “그 연장선에서 우리 군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무수단 미사일 등 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대비하고 있다”고 밝힘.
- 정부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위협을 한껏 부풀리다가 그만둘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발사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만약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해 실제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 해상에 떨어질 경우 더 강도 높은 대북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함.

2016. 4. 15.**■ 北, 김일성 생일 중거리 무수단미사일 첫 발사 시도...실패한 듯(연합뉴스)**

- 북한이 김일성 생일인 15일 동해안 지역에서 무수단(BM-25)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보이는 발사체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됨.
-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안 지역에서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힘. 북한이 발사를 시도한 발사체는 무수단 미사일인 것으로 알려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발사를 시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무수단미사일의 사거리는 3천km로, 노동미사일(1천300km)의 2배를 훌쩍 넘어선다. 일본 전역과 괌 미군기지도 사정권에 포함함.
- 북한이 김일성 생일을 맞아 처음으로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일단 실패한 것으로 보임.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4.11	한미 해군, 경남 진해서 재난구조 훈련...합정 2척 투입(연합뉴스)	
	4.12	한미, 軍 항공기 인증 공유...연합작전 효율성 높인다(연합뉴스)	
	4.15		美, KN-08 본토대부분 타격능력...총선 결과로 사드협의 변화없어(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4.15	한-중 정부 FTA 활용 촉진 위해 손 잡았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4.10	장준규 육군총장, 미국·일본 방문...군 사협력 논의(연합뉴스)	
	4.15		日 올해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 되풀이(연합뉴스) 日정부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영문 포털사이트 개설(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 계	4.11	美 해군장교 중국에 기밀 넘겨 간첩죄 기소...매춘-간통 혐의도(연합뉴스)	
			中, 시진핑 비판 美 타임지 웹사이트도 차단(연합뉴스)
	4.12		중국, G7 해상안보성명에 반발...강렬한 불만 표시(연합뉴스)
			지난해 중국이 사들인 미국 기업 사상 최대...1535천억원 규모(연합뉴스)
	4.13	미국-인도 군사협력 강화한다...중국 견 제 의도(연합뉴스)	
	4.14		중국, 남중국해 우디 섬에 J-11 전투기 16 대 배치 확인(연합뉴스)
			中, 美 인권비판에 맞불 보고서...자기반 성부터 해라(연합뉴스)
4.15	美 무역대표부 “중국, 특정업종 수출보조금 폐지 합의”(연합뉴스)		
		카터 美국방, 또 남중국해 항모 탐승...다에 무력 과시(연합뉴스)	
		中 국방부, 美 필리핀 합동순찰에 “제3국 이익 훼손하지 말라”(연합뉴스)	
4.16		미·중 軍 수뇌부, 남중국해 잇단 방 문...갈등 고조(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 계	4.11	美관리, “케리 국무, 원폭투하 사과하러 히로시마 방문한거 아냐”(연합뉴스)	日 ‘원폭피해 부각’ vs 美 ‘사죄하러 간 것 아니다...시각차(연합뉴스)
			美日 외무장관, 대북대응 연대·TPP 조기발효 노력 합의(연합뉴스)
4.13	백악관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려 중”...공식 인정(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 계	4.11	미러 외무 전화 회담...시리아 휴전 공고화에 협력(연합뉴스)	
	4.12		러, 이란에 방공미사일 S-300 공급 개

			사...미국 반대 표명(연합뉴스)
	4.14		푸틴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 미국이 주문한 반러 선전전(연합뉴스)
	4.15	케리 美국무, 러 전투기 초근접 비행에 "격추할 수도 있었다"(연합뉴스)	
			러, 미 인권보고서에 강력 반발...정치화된 선입견적 평가(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4.12		일본 호위함, 남중국해 베트남 기지에 기항...中견제 '젠걸음'(연합뉴스)
	4.13	中日 경제대화 무산위기...中부총리 "경제는 정치와 밀접 연결"(연합뉴스)	
	4.14	미운털 일본...中, 일본만 대사 초차. 다른 G7은 공사 불리(연합뉴스)	
	4.16	中군기관지, 일본인의 中불법측량 증가...軍지도제작 의심(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중러 관계	4.13	러-중, 사드 한국 배치 공동 대응 방안 논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교도, "아베-푸틴, 내달 초 러시아 소치서 회담"(연합뉴스)	
	4.13		NHK "푸틴 측근 러 하원의장, 日히로시마 방문 검토"(연합뉴스)
			러 외무,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과 쿠릴 반환은 별도 문제(연합뉴스)
	4.15		푸틴, 영토분쟁 쿠릴열도 '타협점 찾을 수 있다'(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4. 11.

■ 한미 해군, 경남 진해서 재난구조 훈련…합정 2척 투입(연합뉴스)

- 한미 양국 해군이 11일 경남 진해 앞바다에서 해양 재난구조 훈련을 시작함. 해군은 이날 “한미 양국 해군이 이달 11~21일 진해만 일대에서 전·평시 해양 재난구조 및 수중 장애물 제거 능력 향상을 위한 연합 구조전 훈련을 한다”고 밝힘.
- 한미 연합훈련인 독수리(FE) 연습에 속하는 이번 훈련은 한미 해군이 조난 함정을 효과적으로 구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초점이 맞춰짐. 이번 훈련에는 우리 해군의 3천500t급 구조함인 통영함과 미 해군의 3천300t급 구조함인 셰이프가드함이 투입됐다. 병력으로는 우리 해군 해난구조대(SSU) 1개 중대 12명과 미 해군의 기동잠수구조대(MDSU) 15명이 참가할 예정임.
- 해군은 오는 12~16일에는 인도네시아 멘타와이 제도 앞바다에서 열리는 다국적 연합 재난구조 훈련인 ‘2016 코모도 훈련’에 참가할 예정임. 해군 제55구조·군수 지원전대장인 제병렬 대령은 “우리 해군의 우수한 구조 능력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고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전·평시 연합 구조 능력을 배양하고 코모도 훈련에서는 우방 해군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6. 4. 12.

■ 한미, 軍 항공기 인증 공유…연합작전 효율성 높인다(연합뉴스)

- 한국 군용 항공기의 성능과 안전성 인증을 미군 당국이 별도의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가 시작됨.
-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23일 미국에서 열린 감항 인증 콘퍼런스에서 미국 국가감항위원회(NAC)와 한미 감항 인증 상호인정 착수를 위한 이행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12일 밝힘. 감항(堪航, airworthiness) 인증은 항공기 성능과 비행 안전성을 당국이 보증하는 것을 가리킨다. 감항 인증 상호인정은 2개 국가가 상대방의 감항 인증 능력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이를 서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 이번 이행 합의서 서명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앞으로 현장실사를 포함해 상대국의 감항 인증체계에 관한 평가작업을 진행할 예정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양측은 올해 9월 말 감항 인증 상호인정서에 서명하게 됨. 우리 군 당국은

- 한미간 감항 인증 상호인정의 성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음.
- 방위사업청에서 감항 인증 정책을 담당하는 김건완 공군 중령은 “한미 감항 인증 상호인정은 대한민국 감항 인증 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군사적으로는 한미 연합훈련의 작전 효율성 증대, 경제적으로는 국산 항공기의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고 말함.

2016. 4. 15.

■ 美, KN-08 본토대부분 타격능력…총선결과로 사드협약의 변화없어(연합뉴스)

- 북한이 향후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KN-08이 미국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능력이 있다는 미국 군당국의 평가가 나옴. 윌리엄 고트니 미군 북부 사령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미국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아직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전시한) KN-08의 모형으로 볼 때 핵 탑재물을 미국 본토 대부분에 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브라이언 매키언 미국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미 당국 간 협의와 관련하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발표에 (한국 측과) 합의하기 이전에 어느 부지가 가능한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함. 매키언 부차관은 “사드 포대의 목적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과 우방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에 위협을 주는 게 아니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하고 있고 설명을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소개함.
- 한편,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한반도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한국의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 주된 관심사는 경제”라며 “외교정책이나 남북관계에는 특별한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나. 한·중 관계

2016. 4. 15.

■ 한·중 정부 FTA 활용 촉진 위해 손 잡았다(연합뉴스)

- 한국과 중국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 기업인 대상 설명회를 함께 열었음.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중국 베이징 샹그릴라 차이나월드 호텔에서 코트라(KOTRA), 중국 상무부, 중국국제무역촉진위(CCPIT) 등과 함께 '한·중 합동 FTA 활용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힘.
- 이호동 산업부 통상국내대책관은 “FTA 활용과 관련한 현지 바이어의 인식을

- 확산하고 양국 기업 간 시너지를 빚어내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추진했다”고 말함.
- 산업부는 “올해 1~2월 대중 수출이 부진한 면이 있으나 관세 인하 폭이 큰 제품을 중심으로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 기업이 FTA 특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통관, 원산지 증명, 비관세장벽 등 애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다. 한·일 관계

2016. 4. 10.

■ 장준규 육군총장, 미국·일본 방문…군사협력 논의(연합뉴스)

-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미국과 일본을 방문해 양국 육군 참모총장과 회담을 하고 군사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특히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일본 방문은 8년 만으로, 양국 군사협력에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육군은 10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오는 11일부터 7박 8일 동안 미국과 일본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밝힘. 장 총장은 미국을 먼저 방문하고 이달 17~18일 일본을 방문한 다음 귀국할 계획임.
- 육군 관계자는 “장 총장의 방일은 양측의 인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같은 군사적 현안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함.
- 육군은 “이번 순방을 통해 장 총장은 미일 양국 군사 분야 고위 인사와 안보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군사 분야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함.

2016. 4. 15.

■ 日 올해 외교청서, ‘독도는 일본땅’ 주장 되풀이(연합뉴스)

- 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6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를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함.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함.
-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발표한 고교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이어 외교청서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해 말 위안부 문제 합의로 개선 기미가 보이던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日정부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영문 포털사이트 개설(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포털사이트를 일본어에 이어 영문으로도 개설해 한국의 반발을 키우고 있음.
- 일본 내각관방은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독도 관련 자료를 소개하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자료 포털 사이트' 영문판을 15일 개설함. 이는 앞서 내각관방이 일본어로 개설한 같은 사이트의 영문판이며 자료 약 200점을 영문으로 소개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이 사이트에 게시된 자료가 정부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음. 그런데도 앞으로 해당 사이트의 자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힘. 일본 정부는 영문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국제사회에 스며들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임.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4. 11.

■ **美 해군장교 중국에 기밀 넘겨 간첩죄 기소...매춘·간통 혐의도(연합뉴스)**

- 미국 해군의 한 대만계 장교가 중국에 기밀정보를 넘긴 간첩 등 혐의로 기소됐다고 CNN과 미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USNI뉴스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함.
- 미 해군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정찰기 부대에서 복무했던 것으로 알려진 에드워드 D. 린이라는 이름의 이 소령은 2건의 간첩 및 3건의 간첩 미수 혐의 외에도 매춘과 간통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당시 제출된 사건수사 기록을 보면 그는 8개월 전에 간첩 및 간첩 미수, 기밀정보 공유, 기록 위조, 매춘, 간통 등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됨. 문건에서 혐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워져 공개되지 않았음. 그러나 USNI뉴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그가 기밀을 중국에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고 전함.

■ **中, 시진핑 비판 美 타임지 웹사이트도 차단(연합뉴스)**

- 인터넷상에서 통제와 관리의 바깥 고삐를 죄는 중국이 미국과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타임과 이코노미스트의 인터넷 사이트도 차단 명단에 올림.

- 중국의 인터넷 검열 체계인 만리방화벽(Great Firewall)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코노미스트의 웹 사이트를 지난 2일부터 전면 봉쇄했다고 밝힌 것으로 영국 BBC 방송이 11일 보도함. 만리방화벽은 이어 다른 매체들도 해당 주간지의 관련 기사를 전재하면 봉쇄될 것이라고 경고함.
- 두 시사 주간지의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차단은 지난주 표지 기사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개인승배를 비판한 데 대한 보복 조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2016. 4. 12.

■ 중국, G7 해상안보성명에 반발...강렬한 불만 표시(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12일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들이 최근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등에 대한 우려를 담은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밝힘.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자와의 문답 형식의 성명에서 “중국은 영토주권과 해양권익을 단호하게 수호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함. 또 G7은 영유권 분쟁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갖지 않았다고 한 약속을 준수하고 “책임질 수 없는 언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함.
-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 등 G7 외무장관들은 전날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폐막한 외무장관 회의에서 중국 등을 겨냥한 '해상안보에 관한 성명'을 발표함. 이들은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남중국해·동중국해 상황 등에 대해 “현상을 변경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위협적이고 위압적이고 도발적인 일방적 행동에 강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밝힘. 또 “국제법에 따른 해양의 분쟁해결을 추구하고 구속력 있는 재판소의 결정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함.

■ 지난해 중국이 사들인 미국 기업 사상 최대...15조5천억원 규모(연합뉴스)

- 지난해 중국이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 기업들을 인수·합병(M&A)한 것으로 나타남.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2일(현지시간) 전국 미·중 친선위원회와 로디움 그룹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중국 기업이 100건 이상의 미 기업 인수·합병 절차를 완료했으며, 금액으로는 총 135억달러(약 15조5천억원)로 집계됐다고 전함.
- 작년 말 현재 1천개를 넘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 선거구 기준으로 80%를 넘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에 고용된 인원은 약 9만명으로 파악됨. 보고서는 올해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M&A 규모는 지난해의 두 배로 불어나

사상 최고치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함.

- 그러나 미·중 친선위는 중국 기업의 미국 기업 인수를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는 미국 내 분위기가 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함. 친선위는 미국 지방 정부 관리들이 최근 몇 년 간 중국의 투자 유치 노력을 기울여왔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외국인 투자가 국가 안보에 미칠 위험을 심사하는 미 재무부 주도 외국인투자위원회 역시 지금까지 “균형감을 갖고 잠재적 안보 위험을 살핌에 따라 문제없는 거래의 문을 닫지 않고 있다”고 판단함.

2016. 4. 13.

■ 미국-인도 군사협력 강화한다…중국 견제 의도(연합뉴스)

- 미국과 인도가 군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13일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를 방문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전날 마노하르 파리카르 인도 국방장관과 회의를 한 뒤 양국이 군수지원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파리카르 장관도 “군수지원협정 협정 초안은 한 달 내 준비될 것”이라고 부연함.
- 오랫동안 비동맹운동의 대표국가로 서방 강국과 강한 군사적 동맹관계를 맺지 않았던 인도가 이처럼 미국과 군사협력 강화에 나선 것은 역내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실제로 양국 장관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를 포함해 역내 항공과 운항의 자유를 확보하고 해상안보 수호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중국 견제 의도를 우회적으로 드러냄.

2016. 4. 14.

■ 중국, 남중국해 우디 섬에 J-11 전투기 16대 배치 확인(연합뉴스)

- 미국이 남중국해 분쟁 수역인 파라셀 군도의 우디 섬(중국명 용싱다오(<永興島>))에 최신예 'J-11' 전투기 16대를 배치했다고 처음으로 확인함. 미군 기관지 성조지는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 중국이 지난 7일 우디 섬에 J-11 선양 전투기 16대를 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은 중국이 우디 섬에 전투기를 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배치 대수로는 유례없는 최대 규모라고 밝힘. 이어 중국의 이런 조치는 지난 2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미국 방문에서 천명한 남중국해 비(非)군사화 약속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또 다른 미정부 관계자들도 남중국해에 인공섬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중국이 전투기까지 파견한 것은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난함. 이들은 이어 중국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관련국들이 남중국해의 비군사화에 주력할 것을 촉구함.

■ **中, 美 인권비판에 맞붙 보고서…자기반성부터 해라(연합뉴스)**

- 미국이 국가별 연례 인권보고서를 내 중국을 비판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인권 실태를 비판한 자체 보고서로 맞붙을 놓음.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4일 ‘2015년 미국의 인권기록’이라는 자체 연례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은 전날 발표한 국가별 인권 보고서로 각국의 인권상황을 멋대로 비판하면서 자국 인권 문제에는 입을 닫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함. 그러면서 “미국의 인권 상황은 해묵은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새로운 문제가 부단히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이 거울로 자신을 비추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밖에 없다”고 덧붙임.
-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인권문제를 핑계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대해 이러쿵저러쿵한다”며 “인권문제를 정치화해 중국의 안정과 발전에 간섭하려는 시도는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말함.

2016. 4. 15.

■ **美 무역대표부 “중국, 특정업종 수출보조금 폐지 합의”(연합뉴스)**

- 중국이 특정 업종에 대해 수출보조금을 지원하던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함.
-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중국은 중국이 시범 기지에 입주한 특정 업종의 업체들에 공공서비스 플랫폼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해온 수출보조금을 폐지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힘.

■ **카터 美국방, 또 남중국해 항모 탐승…중에 무력 과시(연합뉴스)**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15일(현지시간) 남중국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 존 C. 스테니스호를 방문할 예정임.
- 필리핀을 방문 중인 카터 장관은 이날 “(미국과 필리핀의 정례 합동군사훈련인) '발리카탄' 이후에 오늘 스테니스호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힘.
- 카터 장관의 이 같은 행보는 중국을 자극하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키울 것으로 예상됨.

■ **中 국방부, 美 필리핀 합동순찰에 “제3국 이익 훼손하지 말라”(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가 미국과 필리핀이 남중국해에서 실시한 첫 합동순찰에 대해 강력히 반발함.
- 15일 관영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국방부 신문국(대변인실)은 전날 기자와

의 문답 형식 발표문에서 “미국, 필리핀이 합동순찰을 전개함으로써 지역의 군사화(군사기지화)를 추진했다”며 이는 지역의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이어 “우리는 관련국이 양자 군사협력을 추진할 때 제3국을 겨냥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제3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말라고 요구함.

2016. 4. 16.

■ 미·중 軍 수뇌부, 남중국해 잇단 방문…갈등 고조(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잇따라 자국군 수뇌부를 남중국해에 파견하는 등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있음. 미국이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의 남중국해 상의 항공모함 탐승 계획을 밝히자 중국은 최근 관창룡(范長龍)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남중국해 도서 방문 사실을 공개하며 맞섬.
- 중국 외교부는 이날 루강(陸慷) 대변인을 통해 미국을 향해 ‘언행일치’를 요구하며 미국의 조치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주장함. 루 대변인은 “미국이 말하는 항행의 자유는 실제로는 군사적 항행의 자유”라면서 “이에 대해 전 세계 여러 국가는 대국(미국)이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희망할 것”이라고 주장함.

나. 미·일 관계

2016. 4. 11.

■ 美관리, “케리 국무, 원폭투하 사과하러 히로시마 방문한거 아냐”(연합뉴스)

- 미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존 케리 국무장관이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 참석차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한 데 대해 과거 원자폭탄 투하에 대한 사과 목적의 방문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힘.
-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케리 장관과 함께 일본을 방문 중인 익명의 한 미국 관리는 이날 기자들에게 “케리 장관이 (과거 원폭 투하에 대해) 사과를 하려고 히로시마에 온 것이냐고 여러분이 묻는다면 그것에 대한 내 대답은 '아니다'”라고 단언함. 이는 케리 장관의 히로시마, 특히 히로시마평화공원 방문이 자칫 미 정부의 사과 의미로 확대 해석 될 수 있음을 경계한 것임.

■ 日 ‘원폭피해 부각’ vs 美 ‘사죄하러 간 것 아니다’…시각차(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각료로는 처음으로 원폭 피폭지인 일본 히로시마(廣島)시를 방문한 것을 두고 미국과 일본의 시각이 미묘하게 엇갈리고 있음. 원폭으로 많은 인명이 희생된 것이 비극이라는 점에는 양측이 공감하고 있으나 원폭 투하 결정이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비롯한 역사 인식에는 아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평화기념공원 방문이 각국 외교장관에게 매우 큰 임팩트가 있었다고 느끼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일본인이 원폭으로 겪은 고통을 국제사회에 전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임. 일본 정부 등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일본에는 원폭 피해를 강조하는 흐름 속에서 원폭 투하 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는 견해를 밝히는 이들도 있음.
- 미국 정부는 원폭으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 비극적인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대량 파괴 무기가 없어지기를 바란다면서도 이번 방문이 과거 원폭 투하 결정에 대한 평가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하고 있음.

■ 美日 외무장관, 대북대응 연대·TPP 조기발효 노력 합의(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11일 오전 회담을 하고 오키나와(沖縄)현의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은 같은 현 나고(名護)시 헤노코(邊野古)로의 이전이 유일한 해결책이리는데 의견을 모음.
-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양측은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는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가진 별도 회담을 통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발효를 위해 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함.
- 양측은 북한 핵·미사일 개발, 중국이 군사거점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연대를 강화해 대응하기로 함.

2016. 4. 13.

■ 백악관 “오바마, 히로시마 방문 고려 중”...공식 인정(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원자폭탄 투하지인 히로시마(廣島) 방문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백악관을 인용해 13일 보도함. 오바마 대통령의 히로시마행 검토는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외신들이 여러 차례 보도해왔지만, 미국 정부에서 공식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교도는 전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는 대통령이 일본 방문 계획을 잡을 때마다 늘 나오는 질문”이라며 “오바마 대통령과 수행팀은 분명히 우리의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함. 이어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면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은 구체적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힘.

- 미국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이 핵무기 사용에 대한 사과로 비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발 여론이 일고 있지만 이는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좌우할 고려 요인이 아니라고 어니스트 대변인은 덧붙임.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그것은 2차 세계대전에서 싸우고 승리한 미국인들의 용기와 용맹, 영웅적 행위에 대한 대통령의 견해와 일치할 것”이라고 말함.

다. 미·러 관계

2016. 4. 11.

■ 미·러 외무 전화 회담…시리아 휴전 공고화에 협력(연합뉴스)

- 미국과 러시아 외무수장이 10일(현지시간) 전화회담을 하고 시리아 휴전 체제 공고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언론 보도문을 통해 미국 측의 요청으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고 시리아 사태와 아제르바이잔-아르메니아 무력 충돌 사태 등 국제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전함.
- 보도문은 “두 장관이 시리아 휴전 체제 공고화를 위해 미·러 양국이 협력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면서 특히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와 (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알누스라 전선 및 이들과 연계된 테러단체들과의 전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함.
- 두 장관은 또 이 테러조직들이 해외에서 전투원들과 무기를 들여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적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문은 덧붙임.

2016. 4. 12.

■ 러, 이란에 방공미사일 S-300 공급 개시…미국 반대 표명(연합뉴스)

- 러시아가 자국 방공미사일 시스템 S-300의 이란 공급 개시 사실을 확인함.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11일(현지시간) 자국 라디오 방송 ‘에호 모스크비’(모스크바의 메아리)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에 S-300 미사일 공급을 시작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함.
- 로고진 부총리는 “정확히 무엇이 공급됐는지를 밝힐 순 없지만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러시아와 이란 전문가들이 합의한 경로를 따라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함. 올해 말까지 계약에 따른 전체 물량 공급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임.
- 미국은 러시아제 미사일의 이란 공급에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함. 마크 토너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이란에 대한 러시아의 S-200 미사일 공급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의 입장은 그 같은 첨단 방어 시스템을 이란에 공급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말함.

2016. 4. 14.

■ 푸틴, 파나마 페이퍼스 폭로 미국이 주문한 반러 선전전(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공개된 사상 최대의 조세 회피처 자료인 파나마 페이퍼스에 대해 미국의 주문으로 작성된 문서로 반(反)러 선전전의 일환이라고 거듭 비판함.
- 푸틴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TV 생중계로 주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연례 행사인 국민과의 대화에서 자신과 오랜 인연을 맺어온 측근인 러시아의 첼로 거장 세르게이 롤두긴 등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비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20억 달러(약 2조3천억원)의 거액을 운용해왔다는 파나마 페이퍼스의 폭로와 관련 ‘왜 도발적 서방 언론 보도에 정식으로 대응하지 않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함.
- 푸틴은 “문서(파나마 페이퍼스)가 기자들이 아니라 전문 변호사들이 작성한 것이란 느낌이 든다”며 “작성자들은 조세회피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공개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정보는 정확한 것”이라고 인정함. 그러나 “문제는 이 문서가 내 친구들 가운데 누군가가 사업을 하고 역외 조세회피처의 자금이 나를 포함한 관리들에게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지적함.

2016. 4. 15.

■ 케리 美국무, 러 전투기 초근접 비행에 “격추할 수도 있었다”(연합뉴스)

- 발트해에서 훈련 중이던 미군 구축함에 러시아 전투기가 약 10m 거리까지 접근하며 위협적으로 비행한 데 대해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무분별하고 도발적이며 위험한” 행위라고 비난함.
- 케리 장관은 14일(이하 현지시간) 마이애미헤럴드, CNN에스파놀과의 공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교전원칙에 따르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할 수도 있었다”고 밝힘. 케리 장관은 “미국은 공해상에서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러시아 전투기에 대한 격추를 시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음.
-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러시아에 군사 채널을 통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힘.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견이 러시아에 전달됐으며, 잘 소통되고 있는 군사 채널을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려 하고 있다”고 설명함.

■ 러, 미 인권보고서에 강력 반발...정치화된 선입견적 평가(연합뉴스)

- 러시아가 최근 발표된 미국 국무부의 러시아 인권 상황 보고서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가 이번주 내놓은 세계인권보고서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 개입과 크림 병합, 우크라이나 여군 조종사 나데즈다 사브첸코에 대한 유죄 판결, 북(北)캅카스 지역에서의 인권 유린 등의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이데올로기화되고 정치화된 선입견적 평가이자 꼬리표”라고 반박함.
- 러시아 외무부는 “(미 국무부) 보고서 작성자들이 크림반도 주민들의 (러시아로의 귀속에 관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무시했고 (병합 이후) 크림의 인권이 더 악화한 것이 아니다”며 “오직 애써 외면하려는 자만이 우크라이나 본토에서의 재앙적 상황과는 달리 다민족 지역인 크림에서 이루어진 인권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의 현저한 발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함.
- 외무부는 “미국이 반(反)러 편견으로 흐려진 안경을 벗어야 하며, 러시아의 인권 상황을 먹칠하는 일을 그만두고 미국 내의 산적인 인권·민주주의·법치 분야 현안 해결에 심각하게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라. 중일 관계

2016. 4. 12.

■ 일본 호위함, 남중국해 베트남 기지에 기항...중견제 ‘젠걸음’(연합뉴스)

- 일본이 남중국해에 접한 베트남의 기지에 호위함을 파견하는 등 중국의 영유권 공세를 잇따라 견제하는 행보에 나서고 있음. 교도통신과 니혼케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에 따르면 해상자위대 호위함 ‘아리아케’와 ‘세토기리’가 12일 베트남 캄라인만에 기항함. 이들 호위함은 해상자위대 간부 후보생의 '연습 항해'를 표방하고 기항함.
-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캄라인만에 기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중국의 해양 진출을 견제하는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옴.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베트남과의 방위 협력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미국 등과 연대해 남중국해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향한 노력을 쌓아가겠다”고 밝힘.
-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함.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 어떤 두 나라든지 간에 정상적인 협력 전개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 없다”면서도 “그 협력이 제3국을 겨냥한 것이고 지역의 평화·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특히 중국과 연관된 것이라면 중국은 필연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비관함.

2016. 4. 13.

■ 中日 경제대화 무산위기…中부총리 “경제는 정치와 밀접 연결”(연합뉴스)

- 중국과 일본 정부가 올봄에 여는 방안을 검토했던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의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짐. 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왕양(汪洋)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전날 일본 국제무역촉진협회 중국 방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 개최 문제는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 정치의 방향성을 지켜본 뒤 결정할 문제”라고 말함.
- 이어 “경제는 정치와 밀접하게 연계되는 측면이 있다”며 “특히 고위급 교류는 더욱 영향이 크다”고 지적함. “중일경제의 왕래는 장점이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일본 정부가 정치면에서 희망이 보이는 한 걸음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중국에 대한 일본 측의 태도변화를 요구함.
- 왕양 부총리가 중일 고위급 경제대화가 열릴 경우 중국 측 대표를 맡는 만큼 이런 발언은 경제대화 조기 개최에 부정적인 중국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받아들여짐.

2016. 4. 14.

■ 미운털 일본…中, 일본만 대사 초치·다른 G7은 공사 불리(연합뉴스)

- 중국이 남중국해 문제로 자국을 견제한 주요 7개국(G7) 외무장관 회의 성명에 반발해 각국 대사관 간부를 불려 항의할 때 일본과 나머지 국가를 차등 대우한 것으로 알려짐.
- 1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1일 일본 히로시마(廣島)에서 열린 G7 외무장관 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사실상 자국을 비판하는 ‘해양안보 성명’이 채택된 것에 반발해 베이징(北京)에 있는 G7 대사관 간부를 불려 들임. 이때 일본만 대사를 부르고 일본 외의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공사를 비롯해 대사보다 급이 낮은 대사관 간부를 부른 것으로 알려짐.
- 중국 외교부는 성명 발표 다음 날인 12일 기테라 마사토(木寺昌人) 주중 일본대사를 불려 “성명이 남중국해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G7이 다룰 일이 아니다”고 지적함. 교도통신은 중국이 일본만 대사를 부른 것은 의장국인 일본의 주도로 다음 달 예정된 G7 정상회의에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려는 시도를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풀이함.

2016. 4. 16.

■ **중국기관지, 일본인의 불법측량 증가·軍지도제작 의심(연합뉴스)**

- 중국 내에서 적발되는 불법측량 사건 중 다수가 일본인에 의한 것이라고 중국군 기관지 중국육군망(中國陸軍網)이 16일 보도함. 불법측량 목적은 군용지도 제작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도 제기함.
- 보도에 따르면, 2005년 허가를 받지 않고 중국 내에서 탐측활동을 하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정밀한 자료들을 수집한 혐의로 일본인 2명이 추방됨. 2010년 1월에는 한 일본인이 인공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수신기로 신장(新疆)위구르자치구 타칭(塔城)에서 측량활동을 벌이다 적발됐고, 같은 해 4명의 일본인이 스자좡(石家莊) 인근 군사기지에서 간첩활동을 하다 체포됨. 2014년 9월에는 중국지형을 탐측하던 일본간첩이 체포됐다는 중국언론 보도도 나옴.
- 중국육군망은 2006년, 2007년, 2009년에도 신장 허토펜(和田), 상하이(上海) 등지에서 불법적인 지리측량,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테스트 등을 한 혐의로 여러 명의 일본인이 붙잡혔다고 전함. 이 매체는 특히 국가측량국이 2011년 5월 발표한 조사자료를 인용, 입건처리된 3천 여건의 불법측량 사건 용의자 중 다수가 일본인이었다고 전함. 그러나 이 통계자료의 조사기간과 입건된 일본인 숫자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중국육군망은 근대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일본은 중국침략 과정에서 전방위적인 정보 수집을 통해 정밀한 군용 지도를 제작해왔으며 “일본의 대중 측량활동은 종종 전쟁의 도래를 의미하기도 했다”고 주장함.

마. 중·러 관계

2016. 4. 13.

■ **러·중, 사드 한국 배치 공동 대응 방안 논의(연합뉴스)**

-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몽골·일본·중국 순방 일정을 앞두고 이들 국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한반도 및 주변 지역 정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한·미가 추진중인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같이 밝힘.
- 라브로프는 “러시아와 중국의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만나 동북아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를 교환했으며 양국이 현존하거나 증대하는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말함.
- 러시아 외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그동안 미국 사드 시스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해

온 러-중 양국이 배치가 현실화할 경우 공동 대응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됨.

바. 일·러 관계

2016. 4. 13.

■ 교도, “아베-푸틴, 내달 초 러시아 소치서 회담”(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내달 초 러시아 남부 소치에서 비공식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함.
- 일본과 러시아 정부는 세부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며, 15일 도쿄에서 열리는 두 나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정식 합의할 것이라고 교도는 전함.
- 아베 총리는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목적으로 푸틴과의 정상외교에 공을 들이고 있음. 러시아의 크림 반도 병합을 계기로 푸틴과 거리를 두는 벵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서방 지도자들은 아베의 이 같은 행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

■ NHK “푸틴 측근 러 하원의장, 히로시마 방문 검토”(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측근인 러시아 하원의장이 일본 피폭지 히로시마(廣島) 방문을 검토 중이라고 NHK가 13일 보도함.
- 세르게이 나리슈킨 하원의장은 6월 도쿄에서 열리는 문화 행사 참석차 일본에 오는 기회에 원폭 희생자 추모를 위해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NHK가 전함. 이는 핵무기 관련 논의가 미국 주도로 진행되는 것을 견제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고 NHK는 해석함.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11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을 찾은 데 이어 내달 26~27일 일본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벵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히로시마 방문을 검토 중인데 대한 ‘맞불’이라는 것임. 러시아는 2년 전 우크라이나령이던 크림 반도를 합병한 뒤 미국과 대립하는 와중에, 미국의 대 일본 원폭 투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해 옴.

■ 러 외무,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과 쿠릴 반환은 별도 문제(연합뉴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과 양국 간 영토 분쟁 해결은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거듭 밝힘. 라브로프 장관은 12일(현지시간) 몽골·일본·중국 순방 일정을 앞두고 이들 국가 언론과 한 인터뷰에서 일본과의 평화조약 체결 협상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평화조약 체결과 쿠릴 4개섬(일본

- 명 북방영토)을 둘러싼 영토 분쟁 문제를 연계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 “양국이 함께 서명한 1956년 공동 선언(소련-일본 공동선언)은 양측이 서로에 대한 (영토) 요구를 포기하며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할 과제는 평화조약 체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평화조약 체결 협상에서 영토 문제가 논의돼야 한다는 언급은 (공동선언에) 없다”고 지적함.
 - 라브로프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시로 이 문제(평화조약 체결)를 논의하기위한 차관급 대화 채널이 구축돼 있다”면서 “대화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양측의 입장이 크게 달라 쉽지 않다”고 털어놓음.

2016. 4. 15.

■ 푸틴, 영토분쟁 쿠릴열도 ‘타협점 찾을 수 있다’(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일본과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 대해 “언젠가 타협점이 찾아질 가능성이 있고 찾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함.
- 푸틴 대통령은 5월로 예정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러시아 방문에 대해 “미국 등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친구들이(러시아와의)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함.
- 일본 언론은 푸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5월에 열릴 이세시마(伊勢志摩)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영토문제 해결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의장국인 일본이 G7 국가의 대 러시아 유화론을 주도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함.

III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4.12	캐나다, 北종업원 집단탈북에 “김정은, 주민인권 보장하라”(연합뉴스)
		전문가들, “집단 망명, 북한 정권 불안정 징후”(미국의소리)
		中 유명작가 “집단탈출, 北이 인간 지옥임을 증명”(연합뉴스)
		中 보도통제 해제이후 집단탈북 반응 봇물…탈북 도와야(연합뉴스)
	4.13	수젠 솔티, 북한자유주간 서울 행사서 ‘北 붕괴가능성’ 논의(연합뉴스)
		북 해외노동자, 외국생활 환상에 빠져…(자유아시아방송)
		미국, 북한 정치적 탄압 계속…인권상황 평가는 없어(연합뉴스)
4.14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 탈북자 문제 청문회 개최(미국의소리)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인권 유린,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미국의소리)	
	폴란드 최대일간지 열악한 북한 노동자 실태 보도(연합뉴스)	
4.15	다양한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 체제 변화(미국의소리)	
	집단 탈북 사태 북한사회에 빠르게 전파(자유아시아방송)	
4.16	북한 정부 인권 유린 부인하지만, 국제사회 다양한 증거 확보(미국의소리)	
북한인권 내부동향	4.12	WSJ, 北 해외식당 종업원의 삶 조명…며칠마다 자아비판(연합뉴스)
		北, 종업원 집단귀순에 “전대미문의 납치”...첫 공식반응(연합뉴스)
	4.15	北, 식당종업원 집단탈북에 “유인납치 범죄행위” 또 주장(연합뉴스) 북한, 美 인권보고서에 “극악한 적대행위” 반발(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4.10	법무부 北인권기록보존소 설치…北인권기록센터에 검사 파견(연합뉴스)
	4.11	‘집단탈출 北식당 종업원’ 유관기관 합동조사 개시(연합뉴스)
	4.12	정부, 北종업원 집단탈북에 “관련국 협조 전혀 문제없다”(연합뉴스)
탈북자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4.11	中, 北종업원 집단탈출 공식확인…합법여권으로 6일 새벽 출국(연합뉴스)
		대남담당 北정찰총국 대좌, 한국 망명…북한군 출신 최고위급(연합뉴스) 중국내 탈북여성들 호적없이 불안한 삶…한국행이 최종목표(연합뉴스)
	4.12	대북 소식통, 집단탈북 北종업원 동료들 중국에 있다(연합뉴스)

		中엔지 北식당가 소문 흉흉...다른 식당 종업원 13명도 사라져(연합뉴스)
	4.13	북한 무역일꾼, 보위부원도 가족과 함께 탈북(미국의소리)
	4.14	中, 北종업원 복송확인 요청에 “정보 없다”(연합뉴스)
대북지원	4.12	스인도사업에 500만달러 지원(자유아시아방송)위스, 국제기구 대북
	4.15	유엔, 북한 산모에 70만 달러 의약품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4. 12.

■ 캐나다, 北종업원 집단탈북에 “김정은, 주민인권 보장하라”(연합뉴스)

- 캐나다 외무부가 해외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의 집단탈북 보도와 관련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주민들의 인권 보장을 촉구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VOA에 “김정은 제1위원장과 그의 관리들에게 모든 자국민의 인권을 존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은 전함.
- 대변인실은 특히 김 제1위원장에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폐쇄하고 모든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기본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고 VOA는 설명함.

■ 전문가들, “집단 망명, 북한 정권 불안정 징후”(미국의소리)

- 미국 전문가들은 최근 잇단 탈북 사례가 북한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라는 일부의 관측에 대해 엇갈리는 견해를 밝힘.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탈북은 대북 제재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인다고 말함. 클링너 연구원은 앞으로도 더 많은 고위 북한 당국자들의 탈북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를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의 영향이 증가하는 징후나 북한 엘리트들 사이에 생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징후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 미국 서부 스탠포드대학의 데이비드 스트로브 한국학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의 망명과, 정찰총국 출신 북한 군 대좌의 지난해 망명을 한국 정부가 확인한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함. 스트로브 부소장은 두 사례가 다른 징후들과 함께 엘리트들을 비롯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함.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징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함.
-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의 불안정과 관련해 김정은 집권 이전에는 북한에 단 15명의 총참모장이 있었지만, 김정은 정권 들어서만 4차례나 교체된 것을 대표적인 불안정 사례로 듦. 또 최근 탈북자들 가운데 엘리트 계층 탈북자 수가 늘어나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 中 유명작가 “집단탈출, 北이 인간 지옥임을 증명”(연합뉴스)

- 중국의 유명 작가가 북한의 국외 식당 집단 탈출사건과 관련해 북한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섬. 중국에서는 신문과 방송 등 언론매체는 물론 인터넷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서 북한 관련 언급은 사실상 통제된다는 점에서 이런 비난은 이례적임.
- 12일 홍콩 봉황망(鳳凰網)에 따르면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유명작가 우뤄위(吳若愚)는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한국으로 도피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란 제목의 글을 실었음. 그는 이 글에서 노동신문을 비롯한 매체들이 북한 각계에서 김씨 일가를 찬양한다고 보도하는 상황과 한국 언론을 포함한 외신이 북한 식당종업원 13명과 인민군 소속의 정찰총국 대좌의 귀순 소식을 보도한 것을 대비시킴.
- 그러면서 “북한인의 북한 지도자에 대한 경애는 겉으로는 경건하고 정성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구란 점을 알 수 있다”고 적음. 우뤄위는 “북한에서 공직자들은 죄명을 날조해 처형될 위기에 직면해 있고 평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아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며 “북한에 머무르는 것은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것이고 한국으로 도피하는 것은 암흑을 박차고 광명을 찾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함.

■ 中 보도통제 해제이후 집단탈북 반응 봇물...탈북 도와야(연합뉴스)

- 중국내에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출 소식이 전해진 뒤 중국인들은 “불쌍한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줘야 한다”는 반응들을 보임.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11일 “(실종 신고된) 북한 국적자 13명이 6일 새벽 유효한 여권을 갖고 출경(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중국내에 이들의 집단탈출 사실이 공개됨.
- 중국 뉴스포털과 관영매체는 중국 외교부의 답변을 전하면서 여종업원 탈출 사실을 일체히 보도했고, 한국 정부의 지난 8일 발표 이후에도 검색이 되지 않던 관련 뉴스들이 검색되기 시작함. 곧이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에서는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들 여종업원의 탈북과 관련해 열띤 토론이 이어지고 있음.
- 중국 당국의 합법적 출국이라는 대응에 주목하며 아이디어가 'mclaile'인 누리꾼은 “그들을 도운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며 “조선 인민들은 정말로 불쌍하다. 도울 수 있는 한 도와줘야 한다”고 함. 또 “중국 정부가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번 일은 정부를 지지한다”, “다 말하지 않아도 안다. 우리는 모두 이해했다. 좋은 일을 했다”, “이들을 만약 북한에 넘겼다면 모두 총살당했을 것. 중국 정부가

덕을 쌓은 것”이라는 반응이 대세를 이룸.

■ **수잔 솔티, 북한자유주간 서울 행사서 ‘北 붕괴가능성’ 논의(연합뉴스)**

- 이달 하순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자유주간’(4.24~30) 행사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미국의 북한 인권 운동가인 수잔 솔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는 최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올해 북한자유주간 행사에서 북한 정권의 붕괴 가능성 및 국제사회 대응과 관련한 탈북자들의 제안이 집중 논의된다”고 밝혔다고 이 방송이 12일 전함.
- 솔티 대표는 구체적으로 “북한 인민군이 북한 민주화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논의할 예정”이라며 인민군 장교 출신 탈북자가 토론회에 참가한다고 설명함.

2016. 4. 13.

■ **북 해외노동자, 외국생활 환상에 빠져...(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방 일간지인 스타스 앤 스트라이프스(Stars and Stripes)가 지난 12일 북한 해외노동자의 비참한 생활상을 소개함. 이 매체는 AP통신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과 가진 인터뷰를 인용해 세계 각지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북한 노동자의 실상을 자세히 전함.
- 2000년대 초 중국 북동부의 달리안, 즉 다롄에서 식당 종업원을 했던 리성희 씨는 “북한 여성들은 외국식당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다”면서 너도 나도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으로 나가기 위해 뇌물까지 바쳤다고 말함. 90년대 말 쿠웨이트 건설현장에서 일했던 림일 씨는 “외국에 일하러 나가게 되면 좋은 담배를 피면서 멋지게 맥주도 마실 수 있는데 북한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모두 그림이 떡”이었다며 “외국에서 3년 정도 일을 하면 텔레비전과 녹음기, 그리고 냉장고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선호했다”고 설명함.
- 식당 종업원이었던 리 씨는 손님이 강제로 술을 부어도 북한 당국이 책정해 놓은 외화벌이 목표액을 채우기 위해 억지로 마셔야 했고, 목표액을 벌지 못한 동료 여종업원은 남자 손님과 잠자리까지 함께 했다고 폭로함.
- 쿠웨이트에서 건설노동을 했던 림 씨는 당초 북한 당국이 약속했던 월급 120달러를 한번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었으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 밤중에 다른 공사장에 나가 일을 해야 했다고 하며 고통스런 기억을 떠올림.
- 시베리아에서 트럭을 몰았던 김 씨의 경우, 벌목 현장에서 쓰러지는 나무에 맞아 숨지는 북한 노동자를 많이 봤다면서, 시체는 겨우 얼굴만 형질로 가린채 몇

달 동안 빈 건물에 방치해 놓곤 했다고 밝힘.

2016. 4. 14.

■ 미국, 북한 정치적 탄압 계속·인권상황 평가는 없어(연합뉴스)

- 미국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정치적 탄압을 계속하고 정치적 반대를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함. 그러나 기존의 입장처럼 북한 인권의 전반적 상황에 대해 “세계 최악”이라거나 “개탄스럽다”는 직접적 평가를 내놓지 않음.
-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15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을 쿠바와 중국, 이란, 수단, 우즈베키스탄과 함께 독재정권으로 지칭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비판함. 국무부는 총평에서 “북한은 김씨 일가가 60년 넘게 이끌고 있는 독재국가”라며 “주민들은 이런 정부를 바꿀 능력이 없으며, 북한 당국은 언론과 집회, 결사, 종교, 이동, 노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등 주민들의 삶을 다양한 측면에서 엄혹하게 통치하고 있다”고 밝힘.
- 국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혹독한 조건과 생명을 위협하고 강제·의무노동을 수반하는 북한 당국은 생존 조건이 잔혹하고 수용자들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며 살아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함. 국무부는 또 정치범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공개 처형을 당한 사실을 새롭게 추가함.
- 국무부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사법절차에 의하지 않은 처형을 비롯해 실종, 임의적 감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을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독립적이지도 않으며,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고 밝힘.
- 국무부는 “북·중 국경을 건넌 여성 탈북자와 노동자들은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다”며 “강제 노동은 대규모 동원이나 재교육 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외국에 고용계약을 맺고 나가 있는 북한 근로자들도 강제 노동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함. 특히 국무부는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외국 노동자들이 주로 러시아와 중국에 보내져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며 “수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은 이들이 강제노동의 조건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소개함.

■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 탈북자 문제 청문회 개최(미국의소리)

- 캐나다 상원 인권위원회가 13일, 탈북자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함. ‘북한인권 상황과 탈북자’를 주제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캐나다 토론토 소재 큰빛교회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는 로스 리 씨는 지난 2년 반 사이에 많은 탈북자들이 캐나다를 떠났다고 말함.
- 캐나다 정부의 난민정책 변경으로 지난 몇 년 동안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떠났고,

일부만 남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는 것임.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 난민보호규정을 개정하면서 출신지정국 제도를 도입함. 이 제도는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은 2013년 5월31일부터 적용됨.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들은 캐나다에서 난민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임.

- 캐나다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한보이스’의 크리스토퍼 김 사무총장은 탈북자 문제는 캐나다 정부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함.

■ 휴먼라이츠워치, “북한 인권 유린, 김일성 시대부터 이어져”(미국의소리)

- 국제 인권단체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15일 ‘태양절’을 앞두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강하게 비판함.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 라이츠 워치’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사흘 앞둔 12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인권 유린은 김 주석의 유산이라고 밝힘.
-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김 주석이 무자비한 인권 유린을 바탕으로 북한을 통치했다고 지적함. 그러면서, 김 주석은 사망했지만 그가 자행했던 끔찍한 인권 유린은 지금까지 살아남았고, 손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할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다고 비판함.
- 휴먼 라이츠 워치는 김 주석이 1948년부터 1994년 사망할 때까지 북한을 통치하는 동안 핵심계층과 동요계층, 적대계층 등 세 계층으로 나누는 성분제도를 통해 주민들을 차별했다고 밝힘. 또 김 주석이 공개처형과 강제실종 등의 숙청을 통해 반체제 인사들을 처벌했고, 특히 본인 뿐 아니라 전 가족을 최하위 계층으로 재분류했으며, 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고 밝힘. 아울러 한국인과 일본인은 물론 중국인과 태국인, 루마니아인 등 김 주석 집권 시 자행된 외국인 납치는 지금도 이어지는 김 주석의 인권 유린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함.

■ 폴란드 최대일간지 열악한 북한 노동자 실태 보도(연합뉴스)

- 폴란드 최대일간지 가제타 비보르차가 '빌라누프의 노예들'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자국 내 북한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생활 처지를 다룸.
- 이 신문은 지난 12일(현지시간) 신도시 빌라누프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북한노동자들의 실태를 전하면서 2006년 이래 북한노동자를 받지 않는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와 달리 폴란드는 유럽 내 최대의 북한노동자 접수국으로 남아있다고 보도함. 신문은 북한주재 폴란드대사관이 폴란드 기업으로부터 취업희망 일선을 요청받아 북한 회사를 접촉하고 나서 서류를 작성한 뒤 비자를 발급하는 형태로 합법적 취업이 이뤄진다고 설명한 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을

- 인용해 현재 폴란드 내 북한노동자 수는 최소 800명이라고 덧붙임.
- 신문은 북한 정권이 해외노동자 취업을 통해 정권 유지에 필요한 경화를 벌어들인 다면서 폴란드 내 북한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310 즈워티(9만4천 원) 수준이라고 보도함. 또 2006년 북한노동자들이 산도미에슈 인근 과수원과 그단스크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음을 자사가 보도한 바 있고, 모든 노동현장에선 여권이 압수되고 일터와 숙소만 오가며 주 72시간 노동을 하는 상황이 비슷했으며 임금 대부분이 북한 정권에 탈취됐다고 전함. 또한, 과수원과 그단스크 조선소에서 당시 일한 노동자들은 계약상 월 임금 850달러(98만1천 원)와 달리 20달러만 받았고 상점에서 음식을 훔치기도 했다고 신문은 알림.
 - 신문은 브로츠와프, 카토비체, 크라쿠프, 우지, 스투프 등지에 있는 건설 현장을 북한노동자들이 일하는 폴란드 내 주요 장소로 소개하고 이들은 오전 5시 30분에 일어나 12시간 노동을 한다고 보도함. 특히, 해가 긴 여름에는 밤 10시까지도 일하고 퇴근 후에는 공산정권의 선전을 공부하고 정신교육을 받는다면서, 이들은 탈출할 수는 있지만 북한에 남겨둔 가족 때문에 실제로는 어렵다고 짚음.

2016. 4. 15.

■ 다양한 외부 정보 유입으로 북한 체제 변화(미국의소리)

- 외부 세계에서 북한으로 정보를 들여보내려는 노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미국의 유력 언론이 보도함. 반면 북한 당국은 국경을 넘어 유입되는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음.
-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정부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체제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하고 오랫동안 이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며, 하지만 대북방송이 늘고 휴대용 저장장치가 보급되면서 이런 노력이 벽에 부딪혔다고 전함.
- 탈북자들은 이렇게 전해지는 정보 가운데 북한보다 훨씬 잘사는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속극이 가장 인기가 있다고 말함. 신문은 특히 북한에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생긴 변화로, 북한 정부가 더 이상 북한이 한국보다 잘 산다고 주장하지 않으면서 경제개발을 강조하는 현상을 들었음.
-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 활동에서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힘.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대북방송과 정보 유입 활동을 지원 하는 법에 서명한 바 있음.

■ 집단 탈북 사태 북한사회에 빠르게 전파(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사회가 연이은 북한주민들의 집단탈북 문제에 초 비상 관심을 모우고 있으며, 영국의 언론들도 이런 소식을 긴급타자로 전함.

- 영국의 BBC방송, ‘가디언’신문 등을 비롯한 세계 저명한 언론들은 “북한의 해외 식당은 김정은 정권의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라며 “이 정도로 큰 규모의 탈북은 전례가 드물고, 한국 정부가 이를 곧바로 공개한 것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함.
- 방송, 신문, 소셜네트워크인 SNS 등을 통해 북한여성종업원 집단 탈북 소식을 전해들은 영국의 탈북민들은 북한정권의 운명도 이제는 끝이 보일 날이 머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임.
- 또 영국 탈북민 단체인 ‘재영 조선인 협회’를 이끌고 있는 최중화 회장은 이번 탈북사태를 바라 보며 북한 내부도 그렇지만, 특히 해외에 파견되는 일꾼들에 한해서는 세 명 중 한 명이 북한 보위 부나 당 조직 부 정보원들인데, 이러한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은 감시자들조차도 북한정권이 아닌 탈북에 동조를 했다는 증빙이라고 말함. 그러면서 이러한 소식들은 북한독재정권이 무너지고 통일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곳 뉴스라고 덧붙임.
- 영국에 본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국제 탈북민 연대’ 관계자도 중국에 주재한 북한식당 종업원 13 명의 집단 망명은 북한사회와 북한정권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함. 이 관계자는 이번 집단 망명이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 대북제재 속에 국경경비를 한 층 더 강화 하고, 또 러시아와 불법체류자 강제송환 협정을 맺는 등 탈북자 방지 노력을 펴는 가운데 발생 했다면 5월에 열리게 될 노동당 7차 대회를 앞두고 김정은 정권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전망함.

2016. 4. 16.

■ 북한 정부 인권 유린 부인하지만, 국제사회 다양한 증거 확보(미국소리)

- 북한은 지난 13일 발표된 미 국무부의 인권보고서에 대해,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비방증상이라고 반박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같이 주장함. 특히, 미 국무부가 지적한 자유권 부정과 정치범 수용소 운영, 자의적 처형, 인신매매, 강제노동은 애당초 북한에 존재하지 않는 거짓말이라고 강조함.
- 그러나, 미 국무부 뿐 아니라 국제사회는 북한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와 증인들을 확보하고 있음.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가 이달 초 공개한 동영상에서,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면서 당사자 뿐 아니라 전 가족을 수용소에 보내 고문과 다른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함.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는 민간 고해상도 위성사진 분석업체인 ‘울소스 어널리시스’와 함께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이 계속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음.
- 또한, 북한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이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증언도 잇따르

- 고 있음. 지난 1996년 쿠웨이트의 주택 건설현장에 파견됐던 탈북자 임일 씨는 지난 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 인권회의에서, 쿠웨이트에서 철조망이 설치된 건설현장에서 노예처럼 쉬지 않고 일했지만 월급도 받지 못했다고 말함.
- 국제사회는 북한 정부가 광범위한 인권 유린 사실을 인정하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음.

■ WSJ, 北 해외식당 종업원의 삶 조명…며칠마다 자아비판(연합뉴스)

-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여 년 전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 소재 북한식당에서 일하다가 탈출해 남한으로 귀순한 명성희씨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 식당 일꾼들의 생활상을 소개함.
- 인터뷰에서 명 씨는 다른 북한 여성 7명과 함께 문이 잠겨 있는 식당 방에서 잠을 자다가 새벽 6시가 되면 일어나 일을 시작했다고 당시 일상을 전함. 식당 안에서 다채로운 색상의 한복을 입고 김정일 일가 배지를 가슴에 단 채 춤을 추며 손님을 즐겁게 했고, 손님들의 주문에 맞춰 냉면·보신탕·술 등을 나름. 지도 원급의 북한 식당 매니저는 여종업원들에 대한 감시를 늦추지 않았다. 중국에 도착하기 전에 모두 집중적인 사상 교육을 받았고 현지 식당에서 며칠마다 한 차례 혹독한 자아비판 시간을 가져야 했음. 대신, 식당 월 매출이 2만달러(약 2천300만원)를 넘으면 직원들도 돈을 받을 수 있었음. 실적이 좋은 달에는 직원들은 100달러를 받았음.
- WSJ은 북한이 12개국에서 운영하는 130개 식당에서 벌어들인 돈은 연간 1천만 달러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김씨 일가의 사재로 흘러들어 간다는 북한 전직 관리의 말을 소개하기도 함. 이번 집단 탈출 사건은 북한의 외화벌이 일꾼들에 대한 단속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4. 12.

■ 北, 종업원 집단귀순에 “전대미문의 납치”...첫 공식반응(연합뉴스)

- 북한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귀순에 대해 “전대미문의 유인납치행위”이자 “공화국에 대한 중대도발”이라고 맹비난하며 이에 대한 사죄와 종업원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함.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은 12일 담화를 내고 이번 집단귀순 사건에 대해 “괴뢰패당이 조작한 이번 집단 탈북 사건은 공화국에 대한 중대 도발이며 우리 인민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으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 고 북한의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보도함.
- 이는 지난 7일 종업원 13명이 집단귀순한 이후 북한 공식기관이 내놓은 첫 반응임. 대변인은 이어 “어떻게 해당 나라의 목인 하에 그들을 동남아시아의 어느 나라를 거쳐 어떤 방법으로 남조선까지 끌고 갔는가를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해서도 우회적으로 비난함.
 - 대변인은 “지금 조선반도는 괴뢰패당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 대결책동으로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일촉즉발의 긴장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러한 시기에 우리 인원들에 대한 공공연한 납치행위는 우리 천만군민의 섬멸적 분노를 더욱 무섭게 치솟게 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은 천인공노할 유괴납치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우리 인원들을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상상할 수 없는 엄중한 후과(결과)와 특단의 징벌 조치가 뒤따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함.

2016. 4. 15.

■ 北, 식당종업원 집단탈북에 “유인납치 범죄행위” 또 주장(연합뉴스)

-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이 최근 집단으로 탈북한데 대해 북한 측이 ‘납치’라고 거듭 주장함. 북한의 대남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15일 개인 논평을 통해 “괴뢰당국의 조종하에 정보원 깡패들이 조작한 전대미문의 집단적인 유인납치(납치) 범죄행위”라며 “괴뢰당국은 천인공노할 저들의 죄악에 대해 사죄하고 우리 인원들을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함.
- 이 매체는 “괴뢰 패당은 지배인 놈을 매수하여 우리 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남조선으로 끌고가기 위한 구체적인 각본을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실행하였다”면서 “(지배인 놈은) 비행기 안에서도 남조선에서 일할 데 대한 특수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거짓말로 그들을 얼려 넘겼다”고 주장함.

■ 북한, 美 인권보고서에 “극악한 적대행위” 반발(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미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한 데 대해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반발하며 “미국이 후회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미국의 ‘2015년 나라별 인권실태보고서’에 대한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미국이 반공화국 인권소동에 집요하게 매여달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국제적 영상에 먹칠을 하고 우리 내부를 와해시켜 제도전복의 야망을 실현해보려는 극악한 적대행위”라고 답했다고 중앙통신이 보도함.
- 대변인은 “미국이 인권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있다고 걸고든 자유권 부정이나 정치범 수용소 운영, 자의적 처형이나 인신매매, 강제노동을 비롯한 모든 현상들

은 애당초 우리에게 있어 본 적이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4. 10.

■ 법무부 北인권기록보존소 설치…北인권기록센터에 검사 파견(연합뉴스)

- 오는 9월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범죄 기록을 보존, 관리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법무부에 설치될 예정이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탈북민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 기록한 북한 인권범죄 자료를 이관받게 됨. 북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는 법무부의 검사가 파견됨. 통일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것으로 10일 전해짐.
- 북한 내 인권범죄는 주로 국내 입국하는 탈북민 대상 면접조사를 통해 발굴되며, 범죄기록은 북한인권기록센터에 축적된 뒤 3개월마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이관될 예정이다. 통일부가 탈북민을 통해 북한 인권범죄 사례를 수집할 때 북한인권기록센터에 파견된 법무부 검사도 동행하게 됨.
-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인터뷰를 할 때마다 법무부 검사와 공동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공동 조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이 당국자는 “통일부 조사관과 법무부 검사가 공동으로 하는 조사는 피해자 대상 수사개념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함.
- 올해 9월께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설치되면 북한 당국과 간부들에 의해 자행되는 조직적인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기록, 관리해 직간접적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음.

2016. 4. 11.

■ ‘집단탈출 北식당 종업원’ 유관기관 합동조사 개시(연합뉴스)

- 지난 7일 국내 입국한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을 대상으로 한 유관기관의 합동조사 절차가 시작된 것으로 11일 알려짐.
- 정부의 한 소식통은 “탈북 종업원들은 지난 주말까지 휴식을 취하고 지금은 유관기관 합동조사를 받기 시작했다”고 밝힘. 탈북 종업원들은 지난 4~5일께 중국 소재 북한 해외식당에서 탈출한 뒤 동남아의 한 국가를 경유해 7일 국내 입국하기까지 긴장 속에서 장거리를 이동해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짐.
- 정보기관이 주도하고 수사기관과 통일부 등도 참여하는 정부합동조사에선 탈북민의 인적사항과 탈북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짐. 조사기간은

통상 1~3개월로 전해짐.

2016. 4. 12.

■ 정부, 北종업원 집단탈북에 “관련국 협조 전혀 문제없다”(연합뉴스)

- 정부는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탈출 등 탈북민 문제와 관련해 “관련국들과의 협의, 협조에 현재까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함.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집단탈출 사건과 관련해 중국 측에 협력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체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하기가 곤란한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함.
- 중국 정부는 지난주 집단 귀순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여권을 갖고 출국한 사실을 전날 공식 확인함. 조 대변인은 이에 대한 외교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도 구체적인 내용은 일절 밝히지 않고, “탈북민이 한국행을 희망할 경우 인도주의 원칙 하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관련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만 말함.
- 조 대변인의 이런 발언에 대해 중국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부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6. 4. 11.

■ 中, 北종업원 집단탈출 공식확인…합법여권으로 6일 새벽 출국(연합뉴스)

- 중국 정부가 지난주 집단 귀순한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중국에서 합법적인 여권을 갖고 출국한 사실을 공식 확인함.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최근 중국 공안당국이 중국에 거주하는 일부 북한인들의 실종신고를 받았다”면서 “확인 결과 북한 국적자 13명이 6일 새벽 유효한 여권을 갖고 출경(출국)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함. 루 대변인은 이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들이 유효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라면서 “합법적으로 중국에서 출국한 것으로 불법으로 월경한 북한인(탈북자)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해 귀순한 사건에 대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임. 또 이들이 동남아 국가가 아닌 중국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란 점도 중국 정부가 처음 확인함. 루 대변인은 이어 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관련된 중국의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며 “우리는 국제법과 국내법,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적절히 처리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말함.

■ 대남담당 北정찰총국 대좌, 한국 망명…북한군 출신 최고위급(연합뉴스)

- 대남 공작업무를 담당하는 북한 정찰총국 출신의 북한군 대좌(우리의 대령)가 지난해 탈북해 한국으로 망명한 것으로 11일 알려짐.
- 북한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정찰총국에서 대남공작 업무를 담당 하던 A 대좌가 지난해 국내에 입국했다”며 “정찰총국의 대좌는 인민군 일반부대의 중장(별 2개·우리의 소장)급에 해당하는 직위로 볼 수 있다”고 밝힘.
- 북한군 장성이 탈북해 국내에 입국한 사례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짐. 이 소식통은 “A 대좌는 지금까지 인민군 출신 탈북민 중 최고위급으로, 북한 정찰총국의 대남공작 업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북한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탈북자 수는 감소했지만,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전해짐. 북한 내 엘리트층인 외교관들이 잇따라 탈북해 국내 입국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됨.

■ 중국내 탈북여성들 호적없이 불안한 삶…한국행이 최종목표(연합뉴스)

- 중국내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탈출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의 힘겨운 삶이 다시 주목받고 있음. 이번에 한국에 입국한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정식 북한 여권을 갖고 중국에 체류해왔다는 점에서 여권 없이 항상 강제송환의 위협에 시달리는 대부분의 탈북자와는 처지가 다름.
- 특히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 여성은 북중 접경을 건너 중국 동베이(東北) 지방에 머물다 대륙을 종단해 동남아의 제3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뜻을 이루는 건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라고 말함.
- 최근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탈북여성들이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 중국 농촌에서 결혼 연령을 넘긴 남자·이혼남, 심지어 맹인 등 장애인과 결혼 생활을 하는 사례도 있다고 보도해 눈길을 끄. 이들 탈북여성들은 중국의 접경지역에서 생활하다가 중국어는 물론 생활환경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동남아 국가로 가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 탈북여성들은 중국 후커우(호적)를 가질 수 없어 늘 북한으로의 강제송환 위협에 시달림.
- 일부 변경지역에서는 탈북여성이 성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옴. 배고픔을 견디다 못해 탈북 여성이 중국인 또는 조선족 등 전문중개인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으나 이들은 강제송환의 두려움으로 저항을 하지 못함. 베이징의 한 북한문제 전문가는 “중국 내 탈북자들이 어디로부터도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피폐한 삶을 살고 있다면서 탈북자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함.

2016. 4. 12.

■ 대북 소식통, 집단탈북 北종업원 동료들 중국에 있다(연합뉴스)

- 지난 7일 국내 입국한 중국내 북한식당 종업원 13명과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던 일부 북한 종업원들이 중국 현지에 숨어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짐. 특히 남은 종업원 중 일부는 우리 정부의 보호 아래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북한 사정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국내 입국한 13명이 근무했던 중국 내 북한식당(류경식당)에는 5~7명의 북한 종업원이 더 있었다”며 “이들은 중국 현지에 남아 있다”고 밝힘. 중국에 남은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현지에서 피신한 것으로 볼 때 북한으로의 강제 송환은 일단 피한 것으로 보임.
- 중국에 남아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들은 한국행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짐. 이 소식통은 “같이 근무하던 종업원 13명의 국내 입국이 알려졌기 때문에 (한국행을 원해도) 들어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남은 류경식당 종업원들이 동남아에서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전함.

■ 中엔지 北식당가 소문 흥흥…다른 식당 종업원 13명도 사라져(연합뉴스)

-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의 류경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북중 접경 지역의 북한 식당가에 또 다른 식당의 여종업원 실종설 등 소문이 떠돌고 있음.
- 12일 중국 지린(吉林)성 엔지(延吉)에서 만난 현지 소식통은 “엔지 시내 중국 국적의 사장이 운영하는 '口' 개장국(보신탕)식당의 북한 종업원 13명이 석달 전 갑자기 사라졌다고 한다”고 전했음. 지린성 등 중국 동북 3성에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 운영하는 보신탕 식당이 많고 상당수는 북한 여종업원을 채용하고 있음.
- 이 소식통은 “최근 엔지에서 식당 개업을 준비하던 업자가 인력 소개업자에게 북한 여종업원 제공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소문이 전파됐다”고 말함. 소개업자는 “한 식당에서 북한 여종업원 13명이 얼마 전 사라져서 골치가 아프다. 이번 일을 마무리해야 여종업원 파견업무를 재개할 수 있다”고 답했다는 것임.

2016. 4. 13.

■ 북한 무역일꾼, 보위부원도 가족과 함께 탈북(미국의소리)

- 북한 해외 식당 종업원의 집단 망명에 이어 또 다른 외화벌이 일꾼과 보위부원이 가족들과 한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중국 모처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당국의 해외 일꾼 파견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망명도 증가하는 추세라는 분석이 나옴.
-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들을 여행이나 친척 방문을 핑계로 미리 중국으로 보낸 뒤 자신들도 무역 업무를 본다며 중국으로 와서 가족들과 합류함. 이들은 5살짜리 남자 아이를 포함해 모두 10 명으로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개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현재 중국 남방 지역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이 관계자는 무역일꾼의 경우 최근 수 년 간 실적이 저조했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북한 당국에 내야 하는 상납금에 대한 압박이 커져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함.
 -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해 확인해 줄 게 없다는 입장임.

2016. 4. 14.

■ 中, 北종업원 복송확인 요청에 “정보 없다”(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종업원 13명이 집단귀순한 중국 소재 북한 식당의 나머지 종업원의 북한 송환 여부에 대해 “정보가 없다”면서 확인을 거부함.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연합뉴스의 이런 확인 요청에 지난 11일 발표했던 내용을 제외하고는 “추가로 제공할 만한 상황(정보)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
- 루 대변인은 “13명의 북한인들이 유효한 합법적 신분증을 갖고 정상적인 루트로 중국에 들어와, 정상적인 루트로 중국을 떠난 사실은 이미 발표했다”고 덧붙임.
- 이와 관련해 남은 인원 전원 또는 상당수가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보도가 있는가 하면 일부가 중국에 남아 한국행을 기다린다는 관측도 나옴.

5. 대북지원

2016. 4. 12.

■ 스위스, 국제기구 대북 인도사업에 500만달러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가 올해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주의 사업에 미화 약 500만 달러(57억여 원)를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일 보도함.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이 11일 발표한 ‘국제사회 대북 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올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추진하는 ‘스위스 유기 제품 사업’에 450만여 달러를 지원함. 이 사업은 북한 어린이에게 올해 1천300t 규모의 분유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또 스위스 외부무 산하 개발협력처는 국제적십자위원회의 대북 식수 위생 및

보건 사업에 약 50만 달러를 지원함. 스위스는 이와 별도로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핸디캡 인터내셔널’에 10만 달러를 제공해 북한 장애 아동을 돕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RFA는 전함.

2016. 4. 15.

■ 유엔, 북한 산모에 70만 달러 의약품 지원(자유아시아방송)

- 유엔인구기금(UNFPA)이 유엔 산하 중앙긴급구호기금(CERF)으로부터 70만 달러(8억815만원)를 받아 북한 산모들을 위한 의약품을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보도함.
- 중앙긴급구호기금은 RFA에 “유엔인구기금이 이번 사업을 통해 (북한) 산모의 사망률을 10만 명당 6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의약품은 올해 북한 임산부 13만 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함.